

제2장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Ⅱ)

- 생애과정 전환요인 분석 -

박시내

제1절 서론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개진되었다. 한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하여 보육 및 교육의 시기를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결혼 및 출산, 은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통계개발원에서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I) :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 분석(2013년)」을 통해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생애주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의 주된 영역(출생, 보육 및 교육,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 빈 등우리 등)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의 주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Ⅱ) : 생애과정 전환요인 분석」은 2013년 연구의 연장선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연구를 확대·보완하여 생애과정의 영역을 재설정하고, 주제 분석 및 모델링을 통한 각 영역별 취약계층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영역 구성 및 분석주제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가족형성’은 초혼연령 및 출산간격의 변화와 한 부모 가구의 현황과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코호트별 출산연령 및 출산기간, 한 부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출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델링한다. 2. 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에서는 비교적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관리직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상태를 학업과 일의 네 가지 유형별로 구분하고, 연령별 학업 및 일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 가늠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층 고학력화



및 재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청년층 중 재학 중 인구의 비중 추이를 살펴본다. 3. 주거에서는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 및 주택유형의 분포를 살펴보고, 젊은층 및 고령층의 주택소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 취약계층은 주로 내 집 마련 이전 시기인 신혼부부와 1인 노인가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주거상황 및 내 집 마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4. 건강과 관련해서는 활동제약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 센서스에서 활동제약은 신체적 및 정신적 제약, 취업활동 제약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활동제약자의 지리적인 분포와 돌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5. 통근·통학 및 거주지 이동은 인구이동 요인에 관련된 영역이다. 여기서는 통근률 및 통학률의 전국적 분포를 살펴보고, 거주지 이동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갖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의 양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센서스 자료에서 총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즉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기혼여성의 학력 및 직업위세와 출산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최근 수 십년 사이 우리사회의 이혼률의 증가는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혼의 증가로 한 부모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센서스 자료에서 한 부모 가구 추이 및 현황,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부와 한모 가정의 차이 및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해왔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대학진학률이 아닌, 청년층 고용문제의 심각성이다. 따라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넷째, 주거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결혼기간 초기의 신혼기 및 고령기에 집중하여 이들의 주거현황 및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이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다.

제2절 해외사례 및 분석틀

1. 호주 사례

호주 통계청(ABS)은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과정을 통한 중요한 단계와 사건의 시기를 분석하였다. 「호주 원주민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결과」에서

1)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Outcomes Across the Indigenous Australian Life-course」 ABS, 2010

ABS 2006 5% 센서스 표본 파일(Census Sample File : CSF)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2,437명의 호주 원주민과 913,262명의 비원주민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애과정의 7개의 주제(영역)²⁾을 선정하고, 영역별 기초 통계와 모델링(생애과정 결정요인)을 통해 생애과정의 주요 특성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7개의 생애주기의 폭넓은 주제에 관해 회귀 스타일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각 영역별 종속변수에 대해 다음의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해 서술한다. 각각의 연구주제는 첫째, 종속변수가 생애과정에 따라 다를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이 확률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셋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통제된 후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생애과정 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넷째,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통제된 이후에 생애과정에서 여전히 변동이 나타나는가? 다섯째, 생애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특성을 통제한 후 원주민 인구와 비원주민 인구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는가?

〈표 2-1〉 호주 ABS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 : 분석주제 및 종속변수

| 주제 | 모델링 주제 | 종속변수 |
|---|--|--------------------------------------|
| 출산 및 가족형성 (Fertility & Family formation) | - 합법적 결혼, 사실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총출생아 수 결정요인 | 합법적 결혼, 출생아 수, 무급보육 |
| 인구이동과 거주지 이동 (Migration & mobility) | -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14세 15세 이상) | 지난 5년간 거주지 이동 |
| 교육 참여 (Education participation) | - 교육참여 결정요인(고등학교 다닌 적 없는 15~24세/ 25세 이상) - 대학교육 참여의 모델링 | 교육참가율, 비정규학교 참여 |
| 노동시장 참여 (Employment) | - 고용 결정요인 - 시간제 근로 결정요인(15세 이상) - 전문·관리직 결정요인 - 자원봉사 참여 결정요인 - 무급가사노동 결정요인 | 고용, 파트타임 고용, 전문·관리직 고용, 자원봉사, 무급가사노동 |
| 주거 | - 주택소유 결정요인 - 정부, 공공기관 임대주택 거주 결정요인 | 주거환경 |
| 건강 | - 활동제약 결정요인(45세 이상) | 활동제약 |
| 아동 | - 한부모 가정, 실직가정, 저학력 가정 결정요인 (0~14세) | 한부모 가정, 실직 가정, 저학력 가정 |

2) 7개의 주요 영역은 ‘출산 및 가족형성’, ‘인구이동과 거주지 이동’, ‘교육 참여’, ‘노동시장 참여’, ‘주거’, ‘건강’, ‘아동’임



여섯째, 생애과정의 유형과 인구학적, 지리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연관은 고립된 원주민 인구에서 나타나는가? 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가족형성’은 결혼지위(결혼 혹은 사실혼), 출산력 및 총출생아 수, 보육 등 생애과정에서의 출산력과 가족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연구자들은 법적 결혼 혹은 사실혼의 확률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여, 무상 보육제공 여부와 총출생아 수와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2. ‘인구이동과 거주지 이동’은 영구적인 이민과 거주지 이동, 일시적 이동 등의 내용을 다룬다. 호주 원주민들은 대단히 이동성이 강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는데, 이 주제에서는 거주와 일시적 이동과 연관된 요인을 살펴본다. 평균적으로 호주 원주민들이 센서스 이전에 현거주지를 바꾸거나, 혹은 센서스 시행 시 현거주지를 떠나기 때문에, 거주와 일시적인 이동에 관계된 생애과정에 실질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3. ‘교육 참여’는 대학진학률, 비정규 교육 참여율 등의 내용을 다룬다.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정규 교육은 생애과정의 주요특성이다. 중등학교를 마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2~13년간 학교교육을 받고, 상당한 비중의 인구가 정규학교 졸업 후 평생학습을 경험한다. 센서스 자료에서는 개인의 읽기, 쓰기, 문해력 등의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으며, 조사 당시 재학여부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는 원주민 학생들과 비원주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경로 및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의 교육 참여와 관련된 요인을 논의한다.

4.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 전문·관리직 고용상황, 자원봉사와 무급가사노동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 주제에서 연구자들은 고용, 전일제 고용에 비교하여 시간제 고용, 그리고 직업 상태와 연관된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을 분리하여 생애과정에서 자원봉사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호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업이 가난과 사회적 배제에 맞설 중요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성장기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직업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우선선택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생애과정의 시기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정규 학업, 자녀 출산과 양육, 은퇴 그리고 특히 원주민의 경우에는 관습으로 이어오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게 포함된다. 이 주제에서 연구자들은 고용, 전일제 고용에 비교하여 시간제 고용 그리고 직업 상태와 연관된 요인들을 조사한다. 한편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을 따로 분리하여 생애과정에서 자원봉사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를 분석하여 얻은 최초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5. ‘주거’에서는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두 가지 측면, 즉 ‘거주 형태’(주택소유,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와 ‘주거 밀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어느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애를 사는데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이다. 밀도가 높은 거주지는 좋지 않은 건강을 유도하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거 환경을 통제하는 개인의 능력은 현재 거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주제에서는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두 가지 측면, 즉 거주 형태(주택소유,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와 주거 밀도를 조사하였다.

6. ‘건강’은 비원주민과 비교하여 원주민의 생애과정별 생존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한편 센서스에서 ‘핵심 활동(core activity)’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평균적인 생애과정을 측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이다. 일반적으로 기대여명은 오늘 출생한 아이가 현재 사망의 연령분포(current age distribution of deaths)를 기반으로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기간으로 추정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애과정이 지속될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원주민의 생애과정에 대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주민의 평균수명이 비원주민에 비해 더 짧다는 점이다. 이 주제에서는 비원주민 인구와 비교하여 원주민 인구의 생애과정에 따라 생존 확률이 어떻게 다양한지를 조사한다. 또한 센서스에서 ‘핵심 활동(core activity)’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분석의 마지막 영역은 7. ‘아동’이다. 이 주제에서는 전형적인 원주민의 유아기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간다. 특히 우리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잠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은 ‘한 부모 가정’에서의 생활, ‘저학력 가정’에서의 생활, ‘실직 상태인 가정’에서의 생활이다. 우리는 교집합과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고립된 어린 시절의 측면들을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의 정책 과제(policy implication)를 제시한다. 한편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국제적인 비교나 새로운 데이터에 근거하여 원주민의 생애 과정에 대한 주요 의제를 요약한다.

2. 분석틀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제시하고, 생애과정의 전이유형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앞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검토된 바에 따르면, 가족과 개인은 유기적인 존재로, 생성에서 소멸까지 연속적인 생애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과학에서 ‘생애주기(Life Cycle)’는 19세기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선택에 관한 ‘다윈니즘’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대두된 ‘생애주기 원칙 모델(The principle model of life cycle)’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유기체(有機體)의 단선적인 변화를 지칭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이 되는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은 [그림 2-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생애주기는 가족과 개인의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가족 역시 생성과 발전, 소멸을 하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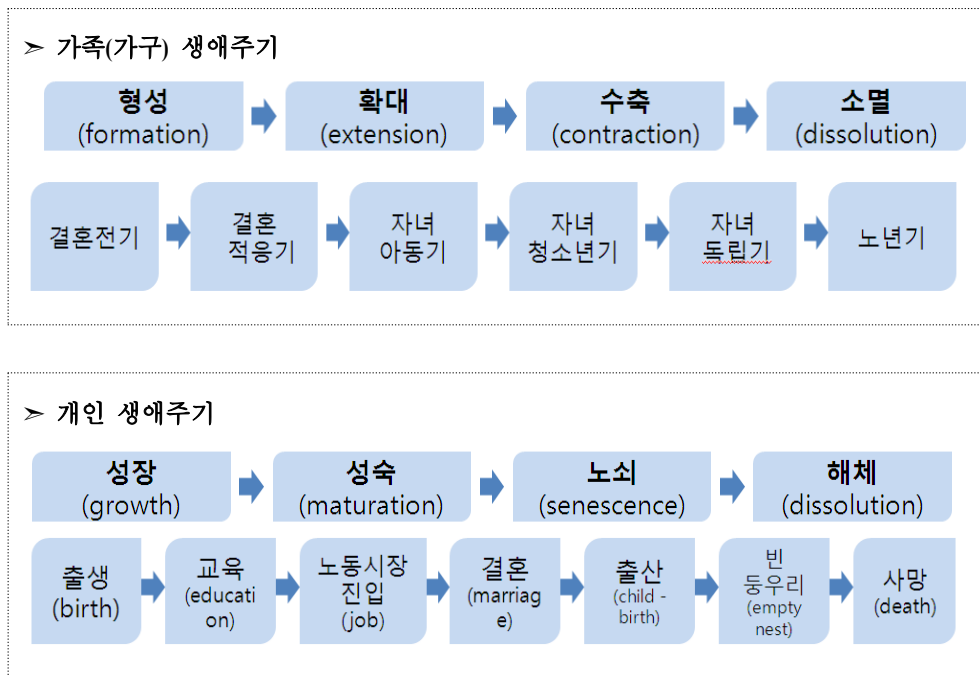
에디드 듀발(Duvall, 1987)은 가족 생애주기 단계 모델은 가족의 형성, 확장, 수축, 소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의 형성(formation)’이란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 시기는 ‘결혼 전기’와 ‘결혼 적응기’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의 확장(extension)’이란 출산·입양을 통해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완결출산(完決出産)까지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자녀 아동기’와 ‘자녀 청소년기’로 구분된다. ‘가족의 수축(contraction)’은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로 첫째자녀부터 막내자녀의 결혼 및 배우자 사망이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자녀 독립기’와 ‘노년기’로 구성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자녀의 출가로 인한 ‘빈 둥우리(empty nest) 증후군’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의 소멸(dissolution)’로, 결혼으로 생성된 가족이 노부부의 사망으로 최종적인 가족의 해체를 맞게 됨을 의미하며, 이 시기를 주로 ‘노년기’라고 한다³⁾.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는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 ‘노쇠(senescence)’, ‘해체(dissolution)’로 설명될 수 있다. 생애주기는 개인의 ‘노화(Aging)’와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한 개인은 출생하여, 보육과 교육 시기를 거친 후, 최종학력을 이수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이후 결혼하고 첫째자녀를 출산하며, 자녀 양육기를 거친다. 남성의 경우 결혼과 자녀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는 결혼과 자녀 양육기를 거치면서 보다 다양한 생애과정을 경험한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며, 자녀 양육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녀가 장성하여, 학업이나 결혼으로 인하여 독립하면 노부부만 남는 시기가 된다. 이러한 생애주기를 ‘빈 둥우리’라고 하며, 이 시기에 노부부의 최종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이뤄진다. 이러한 생애과정 중 이혼과 재혼이라는 생애사건을 겪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유기체의 소멸을 겪는다.

생애주기 영역에서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요인이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예측하는가? 결혼 및 출산의 시기가 다음 생애과정의 전이(transition)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생애과정의 지속성은 가족 생애주기의 지속기간(duration)과 시퀀스(sequence)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즉 가족의 형성(formation)과 확대(extension), 수축(contraction), 소멸(dissolution)의 양상은 어떠하며, 시계열로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가? 한편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교육,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 빈 둥우리 등 개인의 생애주기별

3) 그러나 가족의 소멸의 원인이 부부의 사망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혼 및 재혼율의 변화는 가족 생애주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결혼해체(가족의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망’ 뿐만 아니라, ‘이혼’의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oss & Sawhill, 1975).

특성은 어떠하며, 개인 생애주기의 전이유형은 시계열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가족의 형성 및 과정이 개인의 생애과정의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생애주기 연구는 가족연구 분야에서 많은 실증적인 문제들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2-1]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

본 연구는 2013년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Ⅰ)」의 후속으로 개인의 각 생애과정 전환요인에 관한 기초분석과 모델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해외사례(호주사례)를 참조하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생애과정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구성하고, 적절한 기초통계 및 모델링을 통해 시사점 및 각 생애과정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생애과정의 주요 영역을 ‘출산 및 가족형성(fertility and family formation)’,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주거(Housing)’, ‘건강(Health)’, ‘통근·통학(commutation) 및 거주지 이동(residential mobility)’의 다섯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과 가족형성 시기에는 출산수준과 취약계층으로서 한 부모 가구의 현황과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코호트별 출산연령 및 출산기간,



한 부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에서는 비교적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관리직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상태를 학업과 일의 네 가지 유형별로 구분하고, 연령별 학업 및 일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 가늠하고자 한다. 한편 청년층 고학력화 및 재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청년층 중 재학 중 인구의 비중 추이를 살펴본다.

셋째, 주거에서는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 및 주택유형의 분포를 살펴보고, 젊은층 및 고령층의 주택소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 취약계층은 주로 내집 마련 이전시기인 신혼부부와 1인 노인가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주거상황 및 내집 마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건강과 관련해서는 활동제약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 활동제약자의 전국적인 분포와 수발자 현황을 분석하여,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발자가 필요한 개인의 상황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통근·통학 및 거주지 이동은 인구이동 요인에 관련된 영역이다. 통근률 및 통학률의 전국적 분포를 살펴보고, 거주지 이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1. (출산 및 가족형성) 총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2. (출산 및 가족형성)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3. (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4. (주거)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과제 5. (거주지 이동) 거주지 이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제3절 생애과정 전환요인 분석

1. 출산 및 가족형성(Fertility & family formation)

가. 결혼 및 출산

가족의 형성은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청년층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만혼(晩婚)현상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192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초혼연령은 남성은 24.8세, 여성은 20.4세였으나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3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남성 26.2세, 여성 21.6세, 195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남성 27.4세, 여성 23.8세, 19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남성 28.6세, 여성 25.4세로 나타난다. 한편 197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남성 28.9세, 여성 26.0세이며,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8.1세, 여성 26.3세로 초혼연령이 가장 높은 출생코호트는 남성은 197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이며, 여성은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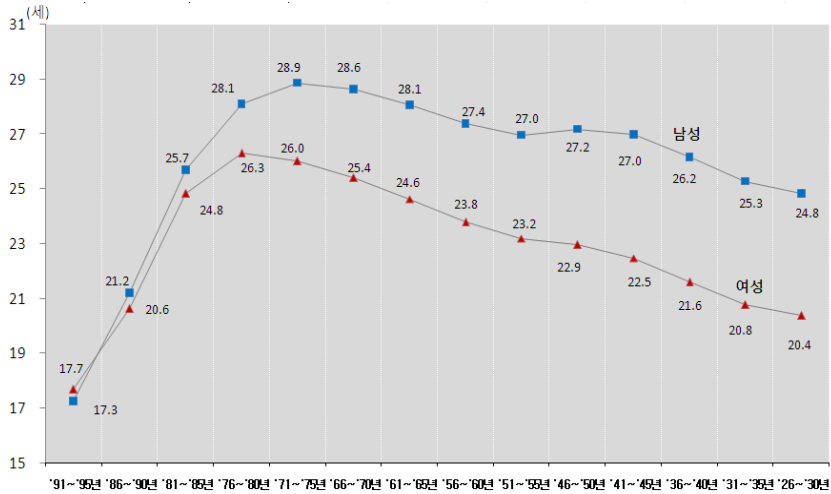
| | 남성 | 여성 |
|------------|------|------|
| ‘86~‘90년생* | 21.2 | 20.6 |
| ‘81~‘85년생* | 25.7 | 24.8 |
| ‘76~‘80년생 | 28.1 | 26.3 |
| ‘71~‘75년생 | 28.9 | 26.0 |
| ‘66~‘70년생 | 28.6 | 25.4 |
| ‘61~‘65년생 | 28.1 | 24.6 |
| ‘56~‘60년생 | 27.4 | 23.8 |
| ‘51~‘55년생 | 27.0 | 23.2 |
| ‘46~‘50년생 | 27.2 | 22.9 |
| ‘41~‘45년생 | 27.0 | 22.5 |
| ‘36~‘40년생 | 26.2 | 21.6 |
| ‘31~‘35년생 | 25.3 | 20.8 |
| ‘26~‘30년생 | 24.8 | 20.4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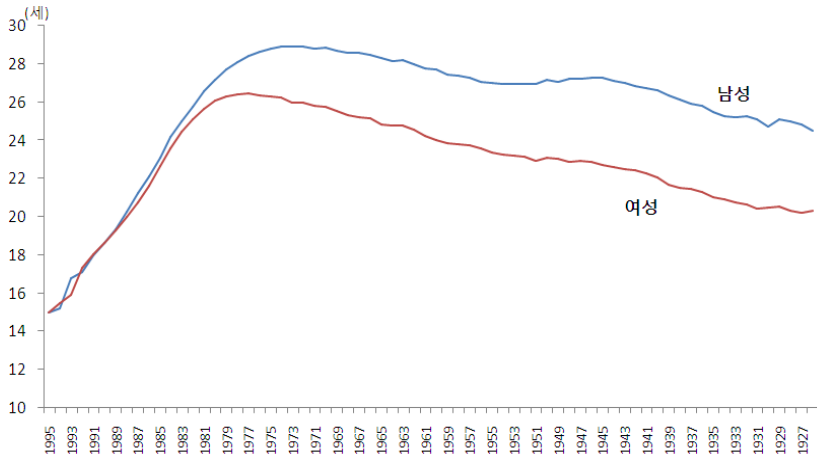
주 : 2010년 기준 20세 이상 기혼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해당사례 매우 적어 해석상 주의요망



< 5세 코호트별 >



< 각 세 코호트별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2010년 기준 20세 이상 기혼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그림 2-2]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

19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그 전 출생코호트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만혼의 영향으로 해당 출생코호트 중 기혼자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2-2]는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을 5세 및 각 세 코호트별로 제시한 것이다. 센서스 조사 시점(2010년)에 충분히 초혼으로의 진입이 이뤄진 코호트인 1970년대 전반 출생 코호트(2010년, 35~39세) 무렵까지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출생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급격히 하강한다. 해당 출생코호트에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조사시점에서 이른 시기에 결혼한 개인만이 선별적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초혼연령과 함께 출산력 및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산기간이다. 센서스 자료 시도항목(충남)에서는 첫째 자녀와 막내자녀의 출산시기를 조사하였다. <표 2-3>은 출생코호트별 출산기간 분포이다. 1920년대 출생코호트는 첫째자녀-막내자녀 출산기간 11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2.4%, 1930년대 출생코호트는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40년대 출생코호트는 5~6년이 22.1%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7~8년은 18.5%, 3~4년은 18.1%로 나타난다.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던 시기에 출산한 1950년대 출생코호트부터 출산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 관찰된다. 1950년대 출생코호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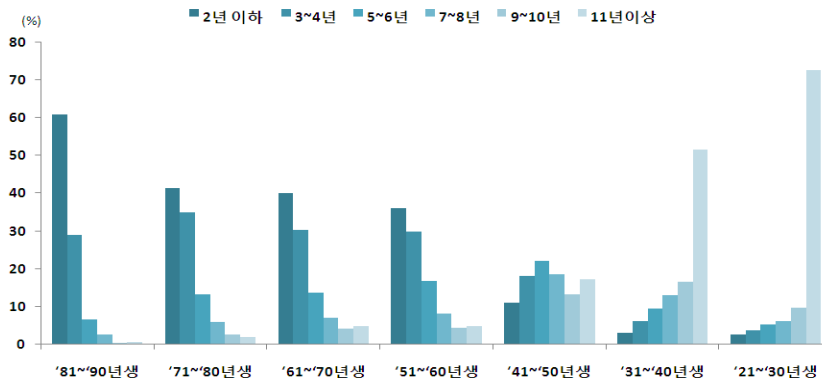
<표 2-3> 출생코호트별 출산기간 분포 : 충남

(단위 : %)

| | 2년 이하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년 이상 |
|------------|-------|------|------|------|-------|--------|
| '81~'90년생* | 60.7 | 29.0 | 6.6 | 2.6 | 0.5 | 0.6 |
| '71~'80년생* | 41.3 | 34.9 | 13.3 | 6.0 | 2.7 | 1.9 |
| '61~'70년생 | 40.0 | 30.3 | 13.6 | 7.1 | 4.2 | 4.8 |
| '51~'60년생 | 36.0 | 29.8 | 16.7 | 8.1 | 4.5 | 4.9 |
| '41~'50년생 | 11.0 | 18.1 | 22.1 | 18.5 | 13.2 | 17.2 |
| '31~'40년생 | 3.1 | 6.2 | 9.4 | 13.1 | 16.6 | 51.6 |
| '21~'30년생 | 2.7 | 3.8 | 5.2 | 6.2 | 9.7 | 72.4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시도항목 : 충남)

주 : 2010년 기준 20세 이상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첫째자녀 및 막내자녀 출산시기 모두 응답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됨 *조사시점(2010년)에 출산이 완료되지 않음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시도항목 : 충남)

주 : 2010년 기준 20세 이상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그림 2-3] 출생코호트별 출산기간 분포 : 충남

〈표 2-4〉 출생코호트별 평균 출산기간 : 충남

(단위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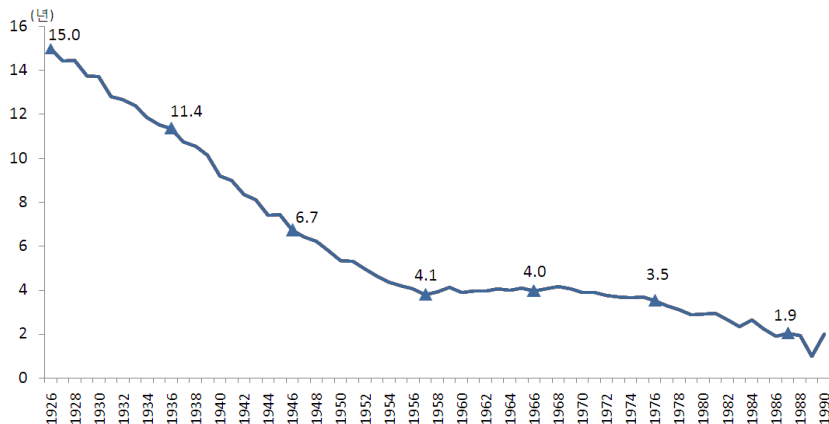
| | 평균 출산기간 |
|------------|---------|
| ‘86~‘90년생* | 1.9 |
| ‘81~‘85년생* | 2.7 |
| ‘76~‘80년생 | 3.2 |
| ‘71~‘75년생 | 3.8 |
| ‘66~‘70년생 | 4.0 |
| ‘61~‘65년생 | 4.0 |
| ‘56~‘60년생 | 4.0 |
| ‘51~‘55년생 | 4.7 |
| ‘46~‘50년생 | 6.1 |
| ‘41~‘45년생 | 8.2 |
| ‘36~‘40년생 | 10.5 |
| ‘31~‘35년생 | 12.2 |
| ‘26~‘30년생 | 14.2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시도항목 : 충남)

주 : 2010년 기준 20세 이상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출산기간 = 막내자녀 출산연령 - 첫째자녀 출산연령

*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는 아직 출산이 완결되지 않아 해석 상 주의 요망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시도항목 : 충남)

주 : 1. 2010년 기준 20세 이상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2. 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는 아직 출산이 완결되지 않아 해석상 주의 요망

[그림 2-4] 출생코호트별 평균 출산기간 : 충남

출산 기간은 2년 이하 36.0%, 3~4년 29.8%, 5~6년 16.7% 순이며, 1960년대 출생코호트는 2년 이하 40.0%, 3~4년 30.3%, 5~6년 13.6% 순으로 나타난다.

<표 2-4>는 출생코호트별 평균 출산기간을 산출한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평균 출산기간은 14.2년이며, 1930년대 후반은 10.5년, 1940년대 후반은 6.1년으로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출생코호트까지 평균 출산기간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의 평균 출산기간은 4.0년 수준이며,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의 평균 출산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난다.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시행되면서 출생 자녀수 및 총 출산기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혼여성의 출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성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각도로 논의될 수 있다. 분절노동시장론에 입각하면, 여성 노동시장은 매우 양극화 및 분절화되어 있다. 이들의 논지에 따르면 전문·관리직 여성들은 대체로 경력 단절없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만,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지위에 놓이게 된다. 한편 여성의 차별출산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직업위세와 출산수준은 반비례 관계이나, 최상위 직군의 경우 다시 출산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시내·박준오, 2012년). 즉 소수의 전문·관리직 여성은 직업의 안정성 및 높은 소득, 제도적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출산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센서스 자료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첫째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기혼여성의 현재 연령과 초혼 연령, 혼인 상태, 남아출생 여부, 가구원 수 및 가구구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론된다. 대체로 초혼연령과 현재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출산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남아의 출산 여부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과 관련하여 출산수준에 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혼여성의 학력수준, 직업, 거주지, 점유형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할 수 있겠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할 것을 가정한다면, 학력과 출산수준은 부(-)적 관계일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직업위세와 출산수준은 직종별로 달리 나타난 것이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비용 및 교육비용 때문에 출산수준은 낮을 것이며,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할수록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출산수준은 낮을 것으로 가정된다. 출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및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2-5>는 기혼여성의 총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인구학적 변인만 포함된 모형 I에서의 모든 독립변인들은 출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다. 현재 연령($\beta = .45^{***}$)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는



$$y(\text{총출생아 수}) = \text{상수항} + \beta(\text{현재연령}) + \beta(\text{초혼연령}) + \beta(\text{혼인상태}) + \beta(\text{남아출산여부}) + \beta(\text{가구원 수}) + \beta(\text{가구구성}) + \beta(\text{학력}) + \beta(\text{직업}) + \beta(\text{거주지}) + \beta(\text{활동제약}) + \beta(\text{자가 여부})$$

〈표 2-5〉 총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 | model I | model II |
|-----------------|-------------------|-----------|-----------|
| | | β | β |
| 인구학적 변인 | 현재연령 | 0.45*** | 0.39*** |
| | 초혼연령 | -0.16*** | -0.15*** |
| | 혼인상태(기준 : 동거유배우) | | |
| | 비동거유배우 | 0.01*** | 0.02*** |
| | 사별 | 0.14*** | 0.14*** |
| | 이혼 | -0.05*** | -0.03*** |
| | 남아출산 여부(기준 : 안함) | | |
| 했음 | 0.12*** | 0.11*** | |
| 가구원 수 | 0.25*** | 0.26*** | |
| 가구구성(2세대) | 1세대 | 0.16*** | 0.13*** |
| | 3세대 | -0.07*** | -0.09*** |
| | | | |
| 사회·경제적 특성 | 학력(기준 : 중등이하) | | |
| | 고등 | | -0.08*** |
| | 대학 | | -0.01*** |
| | 대학원 | | -0.00*** |
| | 직업(기준 : 비경활) | | |
| | 화이트칼라 | | 0.01*** |
| | 블루칼라 | | -0.04*** |
| | 농림어업직 | | 0.08*** |
| | 거주지(기준 : 비대도시 거주) | | |
| | 대도시 거주 | | -0.08*** |
| 활동제약(기준 : 있음) | | | |
| 활동제약 없음 | | -0.04*** | |
| 점유형태(기준 : 자가) | | | |
| 비자가 | | -0.01*** | |
| <i>constant</i> | | | |
| R^2 | | 0.42 | 0.64 |
| 표본수(N) | | 1,575,515 | 1,575,515 |

주 :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됨

*** p < .001, ** p < .01, * p < .1

많은 반면, 초혼연령($\beta = -.16***$)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는 적다. 즉 초혼연령과 출산수준 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동거유배우에 비하여 사별($\beta = .14***$)의 출산수준이 높고, 이혼($\beta = -.05***$)의 출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이를 출산한 경우($\beta=.12^{***}$)일수록 출산수준이 높다. 가구구성과 관련해서는 2세대에 비해 1세대 가구($\beta=.16^{***}$)에 속할수록 출산수준이 높은 반면, 3세대 가구($\beta = -.07^{***}$)에 속할수록 출산수준이 낮다.

모형II는 인구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이 모두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II의 R^2 는 0.64로 모형 I ($R^2= 0.42$)에 비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모형II에서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이 총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중등 이하에 비해 고졸($\beta= -.08^{***}$), 대학($\beta= -.01^{***}$) 및 대학원($\beta= -.0^{***}$) 학력을 소지한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학력수준과 출산수준은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직업은 비경활을 기준으로 하여 화이트칼라직과 블루칼라, 농림어업직으로 구분하여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농림어업직($\beta= .08^{***}$)과 화이트칼라직($\beta= .01^{***}$)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일수록 출산수준은 높은 반면 블루칼라직($\beta = -.04^{***}$)의 출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와 주택 점유형태, 활동제약 여부 역시 출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 출산수준의 대표적인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낮은 수준이며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외환위기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시내·박준오·류광현, 2013). 기혼여성의 거주지별 출산수준은 비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대도시($\beta= -.08^{***}$)에 거주할수록 출산수준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한편 경제상태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기 집이 아닐수록($\beta = -.01^{***}$) 출산수준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즉 거주지역과 주택상황이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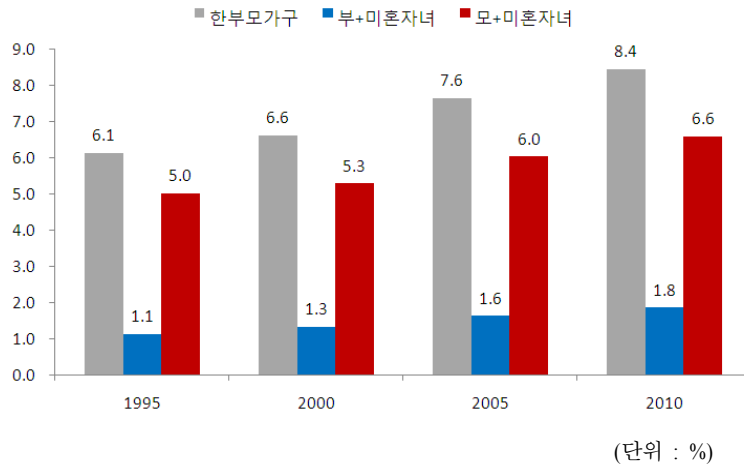
나. 한 부모 가구(single parent household)

한 부모 가구는 2세대 가구 중 부부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부+미혼자녀(부자 가구)’, 혹은 ‘모+미혼자녀(모자가구)’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센서스에서 한 부모 가구는 2세대 가구 중 ‘부+미혼자녀’ 혹은 ‘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되며, 특히 ‘모+미혼자녀(만18세 미만)’로 구성된 가구는 여성 한 부모 가구 중 모자가구로 분류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⁶⁾.

4) 2012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3명이며, 서울은 1.06명, 부산광역시는 1.14명, 대구광역시는 1.22명, 인천광역시는 1.3명, 경기도 1.3명으로 나타난다.

5) 거주지역과 주택상황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주거의 안정이 출산수준을 높이지만, 집값의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다면, 거주지역과 주택상황은 매우 상관성이 높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일정비율의 우선 분양, 한부모 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2012년)」를 실시 및 발표하고 있다.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전수자료(1995-2010년) kosis

주 :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2-5]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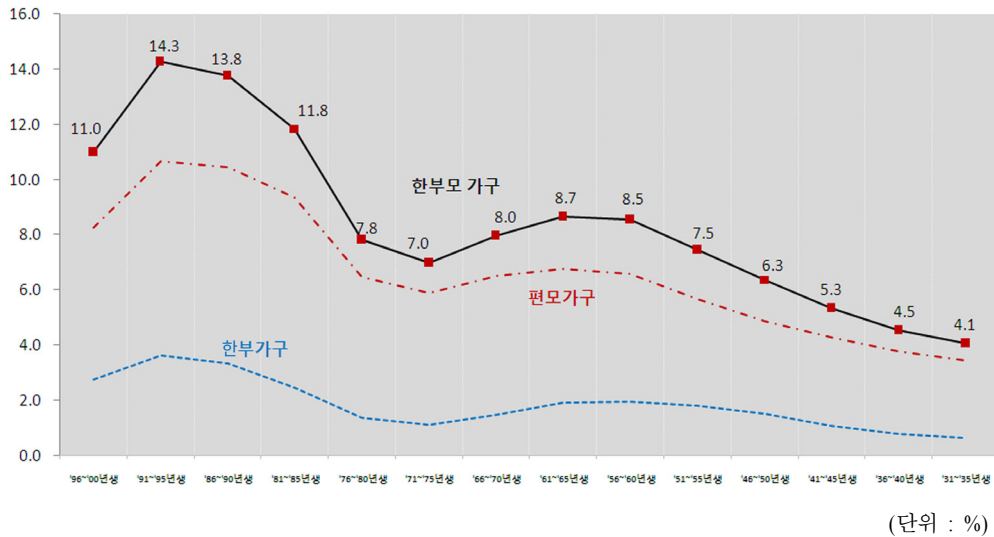
[그림 2-5]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⁷⁾.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의 이혼율은 매우 증가해왔다. 과거 ‘이혼’은 부정적인 인상을 가졌고, 가정이 와해되면서 특히 이혼가정에 속한 18세 미만 자녀들은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센서스 자료에 나타나는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은 1995년 6.1%, 2000년 6.6%, 2005년 7.6%, 2010년 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주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성 한 부모 가구(‘부자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은 1995년 1.1%, 2000년 1.3%, 2005년 1.6%, 2010년 1.8%로 지난 15년 간 0.7%p 증가하였고, 여성 한 부모 가구(‘모자자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은 1995년 5.0%, 2000년 5.3%, 2005년 6.0%, 2010년 6.6%로 지난 15년 간 1.6%p 증가하였다. ‘모자자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이 ‘부자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는데, 이는 한 부모 가구 형성의 원인과 관련된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한편, 이혼 후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⁸⁾.

[그림 2-6]은 출생코호트별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이다.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은 196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출생코호트에서 감소 추세이나,

7) 전체 가구 중 한 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4%에서 2000년 7.9%, 2005년 8.6%, 2010년 9.2%로 증가하였다. 남성과 여성 가구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성 한 부모 가구는 1995년 1.3%에서 2000년 1.5%, 2010년 2.0%, 여성 한 부모 가구는 1995년 6.1%에서 2000년 6.3%, 2010년 7.2%로 증가하였다.

8) 2012년 「전국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 중 모자가구는 63.1%, 부자가구는 36.8%인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부터 다시 증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생코호트별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193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4.1%, 194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5.3%, 195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7.5%, 196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8.7%로 이 구간까지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나 이후 출생코호트부터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은 감소하다가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이후 그 비중은 다시 증가하는데, 198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11.8%,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13.8%, 199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14.3%로 나타난다.



(단위 :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출생코호트는 출생년도로 조작화 됨

각 출생코호트별 인구 중 한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을 도시함

[그림 2-6] 출생코호트별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

<표 2-6>은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특성이다. ‘부자가구’는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남성의 비중이 74.5%로 ‘모자가구’(32.9%)에 비해 41.6%p 높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모자가구’는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이 ‘부자가구’에 비해 높으며, ‘부자가구’는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기 비중이 30.4%로 ‘모자가구’(25.7%)에 비해 4.3%p 높다. 교육 수준은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모자가구’의 아동·청소년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자가구’의 초졸 이하(20.5%) 비중이 ‘부자가구’(17.2%)보다 높다.

경제활동 여부 및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부자가구’에 속한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률(58.0%)이 ‘모자가구’(51.3%)보다 높고, 자영자와 고용주의 비중이 ‘모자가구’보다

〈표 2-6〉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특성

(단위 : 명, %)

| | 한 부모 가구 | | | | | |
|----------|-----------|------|---------|------|-----------|------|
| | 전체 | | 부+미혼자녀 | | 모+미혼자녀 | |
|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 성 | | | | | | |
| 남성 | 1,682,770 | 41.8 | 643,940 | 74.5 | 1,038,830 | 32.9 |
| 여성 | 2,342,603 | 58.2 | 221,008 | 25.6 | 2,121,595 | 67.1 |
| 연령 | | | | | | |
| 19세 이하 | 1,075,034 | 26.7 | 263,412 | 30.4 | 811,622 | 25.7 |
| 20~29세 | 778,652 | 19.4 | 173,421 | 20.1 | 605,231 | 19.2 |
| 30~39세 | 576,565 | 14.3 | 94,635 | 10.9 | 481,930 | 15.3 |
| 40~49세 | 682,271 | 17.0 | 136,860 | 15.8 | 545,411 | 17.3 |
| 50~59세 | 531,055 | 13.2 | 123,263 | 14.3 | 407,792 | 12.9 |
| 60세 이상 | 381,796 | 9.5 | 73,357 | 8.5 | 308,439 | 9.8 |
| 교육수준 | | | | | | |
| 초졸 이하 | 796,059 | 19.8 | 149,117 | 17.2 | 646,942 | 20.5 |
| 중졸 | 539,177 | 13.4 | 123,813 | 14.3 | 415,364 | 13.1 |
| 고졸 | 1,407,446 | 35.0 | 317,475 | 36.7 | 1,089,971 | 34.5 |
| 대재 이상 | 1,282,691 | 31.9 | 274,543 | 31.7 | 1,008,148 | 31.9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가구주 | 1,637,716 | 40.7 | 352,422 | 40.7 | 1,285,294 | 40.7 |
| 비가구주 | 2,387,657 | 59.3 | 512,526 | 59.3 | 1,875,131 | 59.3 |
| 경제활동 여부 | | | | | | |
| 경활 | 1,806,706 | 52.7 | 419,270 | 58.0 | 1,387,436 | 51.3 |
| 비경활 | 1,621,334 | 47.3 | 303,167 | 42.0 | 1,318,167 | 48.7 |
| 종사상 지위 | | | | | | |
| 임금근로자 | 1,373,319 | 76.0 | 308,171 | 73.5 | 1,065,148 | 76.8 |
| 자영자 | 272,731 | 15.1 | 70,863 | 16.9 | 201,868 | 14.6 |
| 사업주 | 115,100 | 6.4 | 30,824 | 7.4 | 84,276 | 6.1 |
| 무급가족종사자 | 45,556 | 2.5 | 9,412 | 2.2 | 36,144 | 2.6 |
| 주택 점유형태 | | | | | | |
| 자가 | 1,813,550 | 45.1 | 374,029 | 43.2 | 1,439,521 | 45.6 |
| 전세 | 917,849 | 22.8 | 175,306 | 20.3 | 742,543 | 23.5 |
| 월세 및 사글세 | 1,137,620 | 28.3 | 265,675 | 30.7 | 871,945 | 27.6 |
| 기타 | 156,354 | 3.9 | 49,938 | 5.8 | 106,416 | 3.4 |
| 주택유형 | | | | | | |
| 단독주택 | 1,490,982 | 37.0 | 346,846 | 40.1 | 1,144,136 | 36.2 |
| 아파트 | 1,897,443 | 47.1 | 378,138 | 43.7 | 1,519,305 | 48.1 |
| 연립주택 | 156,309 | 3.9 | 32,909 | 3.8 | 123,400 | 3.9 |
| 다세대주택 | 400,953 | 10.0 | 86,909 | 10.1 | 314,044 | 9.9 |
| 기타 | 79,686 | 2.0 | 20,146 | 2.3 | 59,540 | 1.9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각각 2.3%p, 1.3%p 높다. 한편 ‘부자가구’와 ‘모자가구’의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모자가구’는 자가(45.6%) 비중이 ‘부자가구’(43.2%)보다 2.4%p 높으며,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은 ‘부자가구’ 30.7%, ‘모자가구’ 27.6%로 나타난다. 주택유형은 부자가구는 모자가구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중이 3.9%p 높으며, 모자가구는 부자가구에 비해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특성(4.4%p)이 발견된다⁹⁾.

<표 2-7>은 한 부모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개인의 특성이다.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 인구는 896,287명으로 남성은 약46만 명(51.7%), 여성은 약 43만 명(48.3%)으로 나타난다. 한 부모 가구 중 모자가구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한 부모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인구 역시 부자가구는 약 22만 명, 모자가구는 약 68만 명으로 모자가구의 아동·청소년기 인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부모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기(0~4세)는 부자가구 9.3%, 모자가구 9.5%로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5~9세 아동기는 부자가구 16.1%, 모자가구 19.0%로, 모자가구의 5~9세 아동 인구의 비중이 부자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5~17세의 경우 부자가구 35.0%, 모자가구 32.8%로 부자가구의 비중이 2.2%p 높다. 한 부모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의 인구분포를 살펴본 결과, 5~9세 아동은 모자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15~17세 청소년은 부자가구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나타난다. 한편 한 부모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개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는 부자가구 44.1%, 모자가구 47.1%로 모자가구의 비중이 3.0%p 높으며, 고졸 이하는 부자가구 26.5%, 모자가구 24.9%로 부자가구가 1.6%p 높다. 교육수준 분포는 연령분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18세 미만은 학교에 재학 중인 시기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진입하기 이전 시기이다. 한 부모 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부자가구의 18세 미만의 경활참가율은 3.3%, 모자가구의 18세 미만은 2.2%인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는 부자가구와 모자가구 각각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91.9%, 95.6%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한다. ‘부자가구’ 및 ‘모자가구’의 18세 미만 가구원의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부자가구에 속한 18세 미만 가구원은 자가(34.8%)의 비중이 모자가구(33.4%)보다 1.4%p 높으며, 전세의 비중은 모자가구(27.3%)가 부자가구(22.5%)에 비해 4.8%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유형별로는 부자가구(39.3%)에 속한 18세 미만 가구원은 모자가구(32.4%)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중이 6.9%p 높으며, 모자가구(54.2%)는 부자가구(46.6%)에 비해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특성(7.6%p)이 발견된다.

9) 그러나 주택특성은 엄밀히 가구단위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표에 제시된 한 부모 가구의 주택특성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표 2-7〉 한 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의 특성

(단위 : 명, %)

| | 한 부모 가구 | | | | | |
|----------|---------|-------|---------|-------|---------|-------|
| | 전체 | | 부+미혼자녀 | | 모+미혼자녀 | |
|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 성 | | | | | | |
| 남성 | 463,654 | 51.7 | 120,052 | 54.7 | 343,602 | 50.8 |
| 여성 | 432,633 | 48.3 | 99,310 | 45.3 | 333,323 | 49.2 |
| 연령 | | | | | | |
| 0~4세 | 84,315 | 9.4 | 20,350 | 9.3 | 63,965 | 9.5 |
| 5~9세 | 163,818 | 18.3 | 35,328 | 16.1 | 128,490 | 19.0 |
| 10~14세 | 349,200 | 39.0 | 86,833 | 39.6 | 262,367 | 38.8 |
| 15~17세 | 298,954 | 33.4 | 76,851 | 35.0 | 222,103 | 32.8 |
| 교육수준 | | | | | | |
| 초졸 이하 | 415,222 | 46.3 | 96,741 | 44.1 | 318,481 | 47.1 |
| 중졸 | 253,222 | 28.3 | 64,161 | 29.3 | 189,061 | 27.9 |
| 고졸 | 227,047 | 25.3 | 58,223 | 26.5 | 168,824 | 24.9 |
| 대재 이상 | 796 | 0.1 | 237 | 0.1 | 559 | 0.1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비가구주 | 896,287 | 100.0 | 219,362 | 100.0 | 676,925 | 100.0 |
| 경제활동 여부 | | | | | | |
| 경활 | 7,306 | 2.4 | 2,507 | 3.3 | 4,799 | 2.2 |
| 비경활 | 291,648 | 97.6 | 74,344 | 96.7 | 217,304 | 97.8 |
| 종사상 지위 | | | | | | |
| 임금근로자 | 6,893 | 94.4 | 2,303 | 91.9 | 4,590 | 95.6 |
| 자영자 | 79 | 1.1 | 35 | 1.4 | 44 | 0.9 |
| 사업주 | 40 | 0.6 | 21 | 0.8 | 19 | 0.4 |
| 무급가족종사자 | 294 | 4.0 | 148 | 5.9 | 146 | 3.0 |
| 주택 점유형태 | | | | | | |
| 자가 | 302,222 | 33.7 | 76,363 | 34.8 | 225,859 | 33.4 |
| 전세 | 234,291 | 26.1 | 49,311 | 22.5 | 184,980 | 27.3 |
| 월세 및 사글세 | 306,596 | 34.2 | 75,904 | 34.6 | 230,692 | 34.1 |
| 기타 | 53,178 | 5.9 | 17,784 | 8.1 | 35,394 | 5.2 |
| 주택유형 | | | | | | |
| 단독주택 | 305,595 | 34.1 | 86,242 | 39.3 | 219,353 | 32.4 |
| 아파트 | 468,969 | 52.3 | 102,122 | 46.6 | 366,847 | 54.2 |
| 연립주택 | 29,991 | 3.4 | 7,251 | 3.3 | 22,740 | 3.4 |
| 다세대주택 | 73,680 | 8.2 | 18,937 | 8.6 | 54,743 | 8.1 |
| 기타 | 18,052 | 2.0 | 4,810 | 2.2 | 13,242 | 2.0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가족형성기에 한 부모 가족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부부 중 한쪽만 있는 경우 생계 및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한 부모 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아이 돌봄’,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 ‘건강’, ‘주거실태’, ‘사회적 지지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부모 가구는 이혼이나 사별로 부부 중 한 쪽이 부재한 상황으로 자녀양육을 여성이 맡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자가구 비중이 부자가구에 비해 높다. 또한 한 부모 상태가 되면, 생계유지가 시급해지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나, 생활수준은 일반가구 수준에 못 미치며,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양육의 질은 악화될 소지가 크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건강 영역에서 발생한다.¹⁰⁾

<표 2-8>은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 분석한 것이다. 센서스에서 한 부모 가구 실태와 관련된 변인은 제한적이므로,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 및 경제적 특성별 한 부모 가구 형성 확률을 분석하였다. 모형 I 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 가구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이며, 모형 II 와 모형 III 은 가구주 성별로 부자가구와 모자가구로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y(\text{한 부모 가구 여부}) = \text{상수항} + \beta(\text{성}) + \beta(\text{학력}) + \beta(\text{가구주 여부}) + \beta(\text{집유형태}) + \beta(\text{경찰여부})$$

<표 2-8> 인구·경제적 특성별 한 부모 가구 확률 분석(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model I 한부모 가구 b (s.e) | model II 한부모가구 b (s.e) | model III 한모가구 b (s.e) |
|---------|------------------|------------------------------|------------------------------|------------------------------|
| 인구학적 특성 | 성(기준 : 여성) | | | |
| | 남성 | -0.61*** (.004) | 1.48*** (.01) | -1.17*** (.005) |
| | 연령 | -0.03*** (.000) | -0.022*** (.000) | -0.04*** (.000) |
| | 학력(기준 : 중졸 이하) | | | |
| | 고등학교 | -0.16*** (.005) | -0.029* (.012) | -0.17*** (.006) |
| | 대학교 | -0.46*** (.006) | -0.36*** (.012) | -0.44*** (.007) |
| | 대학원 | -0.85*** (.013) | -0.66*** (.026) | -0.85*** (.015) |
| | 가구주 여부(기준 : 가구주) | | | |
| | 가구원 | -0.74*** (.005) | .2*** (.01) | -0.96*** (.005) |

10) 여성가족부의 「한 부모가구 실태조사(2012년)」에 의하면, 한 부모 가구의 24.5%가 2주 이상의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 부모 가구의 주거실태는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이들은 생계·양육비 등을 지원받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 | | | |
|------------------|--------------------------------------|----------------|-----------------|-----------------|
| 경제적 특성 | 점유형태(기준 : 자기집) | | | |
| | 전세 | .29*** (.005) | .32*** (.011) | .27*** (.005) |
| | 월세 및 사글세 | .51*** (.005) | .79*** (.01) | .39*** (.005) |
| | 기타 | .07*** (.010) | .56*** (.018) | -.10*** (.012) |
| 경제활동 여부(기준 : 경활) | 비경활 | .17*** (.004) | .05*** (.009) | .18*** (.004) |
| | <i>constant</i> | -.98*** (.007) | -3.23*** (.015) | -1.31*** (.008) |
| | <i>-2LL</i> | 2.143 | 646321.2 | 1.78 |
| | <i>Cox & Snell R²</i> | .029 | .013 | .032 |
| | 표본수(N) | 3,926,158 | 3,926,158 | 3,926,158 |

*** $p < .001$, ** $p < .01$, * $p < .1$

모형 I(한 부모 가구 여부)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b = -.61***$)보다 여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b = -.03***$)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b = -.16***$), 대졸($b = -.46***$), 대학원($b = -.85***$) 학력일수록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이 적어진다. 특히 대학원의 b 값이 가장 커, 학력수준과 한 부모 가구 형성은 강한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특성 변인이 한 부모 가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세 및 사글세($b = .51***$)나 전세($b = .29***$)일수록 자가에 비해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경활일수록($b = .17***$) 경활에 비해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II(남성 한 부모 가구 여부)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b = 1.48***$), 저연령일수록($b = -.022***$), 부자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다. 부자가구가 남성 가구주로 형성되어 남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한 부모 가구 형성 요인과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학력자에 비해 부자가구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중졸 이하 학력자에 비해 고졸($b = -.029*$), 대졸($b = -.36***$), 대학원($b = -.66***$)일수록 부자가구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데, 대학원의 b 값이 가장 커, 학력수준과 부자가구 형성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특성 변인이 부자가구 형성 확률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세 및 사글세($b = .79***$)나 전세($b = .32***$)일수록 자가에 비해 부자가구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경활 상태($b = .05***$)일수록 경활에 비해 부자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다.

모형 III(여성 한 부모 가구 여부)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b = -1.17***$) 여성에 비해 모자가구 확률은 감소하며, 저연령일수록 모자가구 확률은 높아진다.

모자가구가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학력수준별로는 한 부모 가구나 부자가구와 유사하게 고학력자일수록 모자가구에 속할 확률은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b = -.17^{***}$), 대졸($b = -.44^{***}$), 대학원($b = -.85^{***}$)일수록 모자가구에 속할 확률은 감소한다. 이는 모자가구가 부자가구보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의 비중이 높고, 여성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경제적 특성이 모자가구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세 및 사글세($b = .39^{***}$)나 전세($b = .27^{***}$)일수록 자가에 비해 모자가구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경활 일수록($b = .18^{***}$) 경활상태보다 모자가구에 속할 확률이 크다.

한 부모 가구란 부부의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하여 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아동 돌봄, 주거실태, 사회적 지지망(social network)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각별히 요구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센서스 자료를 통해 한 부모 가구의 추이 및 특성, 형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은 1995년 7.4%에서 2000년 7.9%, 2010년 9.2%로 증가하였으며,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 역시 1995년 6.1%에서 2000년 6.6%, 2010년 8.4%로 증가하였다. 한 부모의 가구의 규모를 추산해 보면, 남성 한 부모 가구는 약 35만 가구, 여성 한 부모 가구는 약 125만 가구로 여성 한 부모 가구의 규모가 남성 한 부모 가구에 비해 약 3.6배 크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양육을 여성이 맡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편 출생코호트별 한 부모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 추이는 구간별 특징점이 발견되나, 대체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증가추세이다.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 부모 가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한 부모 가구는 남성 한 부모 가구에 비해 영·유아기 자녀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주거실태 면에서 여성 한 부모 가구의 자가 비중이 남성 한 부모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학력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센서스 조사항목의 차이로 남성 한 부모 가구와 여성 한 부모 가구에 속한 자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한 더 이상의 심도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혼 후 재산분할권 등이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남성 한 부모와 여성 한 부모 가정의 자녀는 정상 가정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특히 여성 한 부모 가구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항로짓 모형을 통해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남성 한 부모 가구와 여성 한 부모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남성 한 부모 가구 및 여성 한 부모 가구 모두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한 부모 가구 형성 확률이 높았으며, 여성 한 부모 가구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센서스에서 경제상황의 대리변수인 점유형태별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자가인 경우보다 월세·사글세 혹은 전세인 경우 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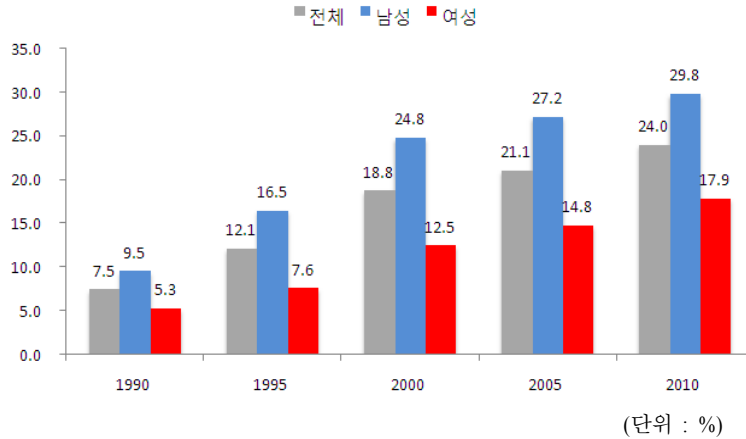
가구에 속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해서는 비경제활동 상태일수록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가족의 형성은 두 성인 부부의 결혼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상실된 한 부모 가족,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가구주 가구 및 그들의 자녀는 생계 및 돌봄, 정신적 지지, 사회적 연결망 등의 영역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싱글맘 싱글대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실태 파악 및 인식의 전환, 또한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교육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으로 형성된 개인의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지위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직업의 획득으로 자아실현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가져와 다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로서 기능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보편화된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수준의 향상 및 고등교육 혜택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의 과잉공급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다. 직업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원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청년층이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은 증가하고 있다.

[그림 2-7]은 청년층(20~34세) 재학 중 인구비중 추이이다. 각 시기별 청년층 인구 중 재학 인구의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1990년, 1995년, 2000년에는 ‘재학’에 ‘휴학’이 포함되었으며, 2005년과 2010년에는 ‘재학’과 ‘휴학’이 별도로 조사되었다.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 상승과 함께 재학 중 인구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청년층 인구 중 재학 중 인구가 7.5%였으나, 2000년 18.8%, 2010년 24.0%로 크게 상승하였다. 즉 2010년에는 20~34세 인구 4명 중 1명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재학 중인 구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1990년 9.5%에서 2000년 24.8%, 2010년 29.8%로 상승하였으며, 여성은 1990년 5.3%, 2000년 12.5%, 2010년 17.9%로 상승하였다.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전수자료(2010년) kosis

주 : 90, 95, 00년은 '재학'에 '휴학'이 포함됨/ 05, 10년은 '재학' 중 인구임 학교급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 중 인구를 집계함

[그림 2-7] 청년층(20~34세)의 재학 중 인구비중 추이 : 1990-2010년

<표 2-9>는 청년층의 재학 중 인구를 연령층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4세 연령층은 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시기로, 청년층 남성은 이 시기에 대학 진학 및 군대로 인한 휴학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여성은 휴학이나 유예 및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과 대학 졸업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20~24세 청년층의 재학 중 인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는 18.1%, 2000년 47.4%, 2010년 62.3%로 크게 상승하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층 남성 중 재학 중 인구(20~24세)는 1990년 21.0%에서 2000년 59.1%, 2010년 72.6%로 지난 20년간 51.6%p 상승하였으며, 청년층 여성은 1990년 15.0%에서 2000년 34.3%, 2010년 50.6%로 지난 20년 간 35.6%p 상승하였다.

25~29세 연령층은 여성의 경우 대학에서의 졸업이 거의 진행된 시기이나, 남성은 군대의 영향으로 재학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며, 이 시기에 대학에서의 졸업이 발생한다. 25~29세 청년층의 재학 중 인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는 3.3%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8.8%, 2010년에는 12.7%로 동 기간 약 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은 1990년 6.0%에서 2010년 18.4%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여성은 1990년 0.7%에서 2010년 6.8%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30~34세는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재학 중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시기별 30~34세 청년층의 재학 중 인구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0.5%, 2000년 1.9%, 2010년은 3.3%로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990년 0.8%에서 2010년 3.7%로 2.9%p 증가했으며, 여성은 1990년 0.2%에서 2010년 2.9%로 2.7%p 증가하였다.

〈표 2-9〉 청년층 재학인구 비중 추이 : 1990-2010년

(단위 : %)

| | | 20~24세 | | 25~29세 | | 30~34세 | |
|----|------|-----------|------|---------|------|---------|-----|
| | | 인구 | 비중 | 인구 | 비중 | 인구 | 비중 |
| 전체 | 1990 | 797,817 | 18.1 | 144,892 | 3.3 | 21,294 | 0.5 |
| | 1995 | 1,311,135 | 30.5 | 198,705 | 4.8 | 28,688 | 0.7 |
| | 2000 | 1,823,647 | 47.4 | 359,200 | 8.8 | 78,765 | 1.9 |
| | 2005 | 1,942,671 | 53.0 | 385,046 | 10.5 | 85,620 | 2.1 |
| | 2010 | 1,903,672 | 62.3 | 448,181 | 12.7 | 122,392 | 3.3 |
| 남성 | 1990 | 482,851 | 21.0 | 129,162 | 6.0 | 17,638 | 0.8 |
| | 1995 | 880,302 | 39.3 | 163,849 | 7.9 | 21,860 | 1.0 |
| | 2000 | 1,199,032 | 59.1 | 275,789 | 13.4 | 51,594 | 2.5 |
| | 2005 | 1,243,354 | 64.9 | 292,297 | 15.7 | 51,493 | 2.5 |
| | 2010 | 1,180,620 | 72.6 | 330,874 | 18.4 | 68,540 | 3.7 |
| 여성 | 1990 | 314,966 | 15.0 | 15,730 | 0.7 | 3,656 | 0.2 |
| | 1995 | 430,833 | 20.8 | 34,856 | 1.7 | 6,828 | 0.3 |
| | 2000 | 624,615 | 34.3 | 83,411 | 4.1 | 27,171 | 1.3 |
| | 2005 | 699,317 | 40.0 | 92,749 | 5.1 | 34,127 | 1.7 |
| | 2010 | 723,052 | 50.6 | 117,307 | 6.8 | 53,852 | 2.9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전수자료(2010년)

주 : 1. 90, 95, 00년은 '재학'에 '휴학'이 포함됨 05, 10년은 '재학' 중 인구임 2. 학교급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 중 인구를 집계함

재학인구의 증가는 다음과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진학을 상승으로 인한 재학인구의 증가이며, 다른 요인은 취업 대기형(유예, 초과학기¹¹⁾) 재학인구의 증가이다. 센서스 자료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엄밀히 분해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재학'이나 '휴학'의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표 2-9>를 통해 청년층의 재학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학기간의 증가로 재학인구가 분포 범위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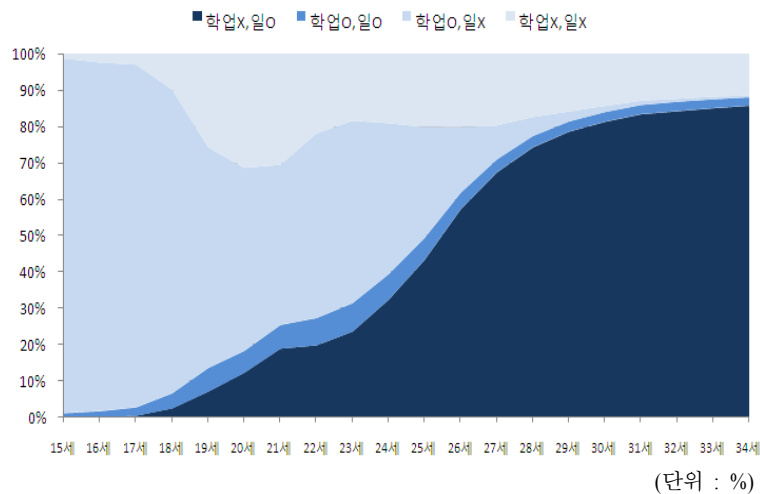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은 정책 및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청년층 고용난이 심각하고,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년기는 최종 교육 이수 후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 및 시장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이다. 한편 직업 탐색기로서 청년층 이직률은 높은 수준이며, 초직 진입 시기 중 취업과 미취업 상태를

11) 유예는 졸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이 확정 안되어 졸업 자체를 미루는 것(재학으로 처리됨)을 말하며, 초과학기는 편입이거나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한 학기 더 다니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청년층은 직업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초직(初職)의 획득이 어렵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구직기간을 거치며,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높은 불안정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기인한다. 청년층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규교육 외의 경력이 없으며,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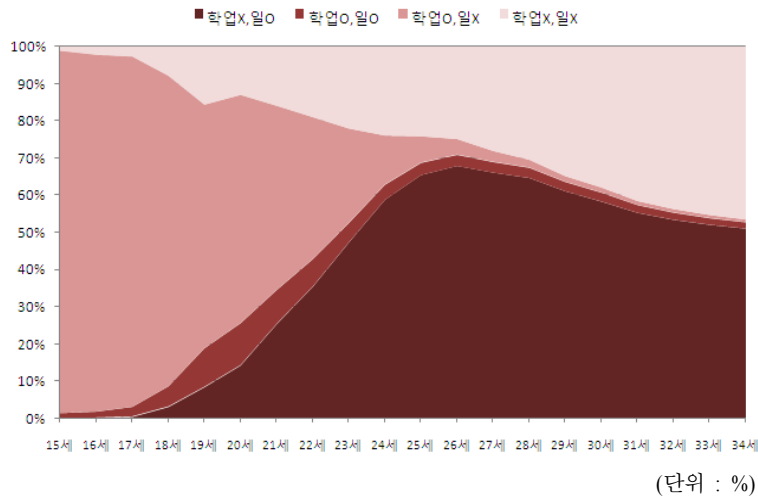
센서스 자료에는 개인의 교육상태 및 경제활동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한다. 이 두 가지 변인을 통해 청년층의 학업과 일의 네 가지 유형을 조합하여 연령 프로파일을 도시하였다²⁾. [그림 2-8]은 청년층 남성의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이다. 15세~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시기로 ‘유형3’(재학+비경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대학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지면서 20대 중반 이후에는 ‘유형3(재학+비경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편 ‘유형1(비재학+경활)’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중이다. 남성 청년층은 20대 중반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시기 이후 ‘유형1(비재학+경활)’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30세 이후에는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다. 한편 ‘유형2(재학+경활)’는 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재학 중 여부와 경제활동 여부를 통해 4가지 유형을 조합하여 작성됨

[그림 2-8]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 : 남성

12) ‘교육상태’는 재학 중인 경우와 비재학인 경우로 분류하였고, ‘경활상태’는 고용된 경우와 비고용인 경우로 분류한 후 두 변인의 조합을 통해 학업과 일의 네 가지 유형을 생성하고, 청년층의 각 세별 학업·일 네 가지 유형의 비중을 도시하였다. ‘유형1’은 비재학+경활, ‘유형2’는 재학+경활, ‘유형3’은 재학+비경활, ‘유형4’는 비재학+비경활임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재학 중 여부와 경제활동 여부를 통해 4가지 유형을 조합하여 작성됨

[그림 2-9]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 : 여성

즉 청년층 중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유형2’는 다른 유형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으며, 각 연령별 비중은 20세 6.0%, 25세 6.0%, 30세 2.6%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학 재학 중인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유형2’의 비중이 두터워지나, 본격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유형의 비중은 감소한다. ‘유형4(비재학+비경활)’은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2-8]에서 ‘유형4’의 비중은 20세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군입대의 영향이다. 즉 군입대로 휴학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유형4’의 비중이 증가하고, 제대 후 복직하는 시기에 ‘유형4’의 비중은 다시 감소하여 완만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2-9]는 청년층 여성의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이다. 15세~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시기로 남성과 동일하게 ‘유형3’(재학+비경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대학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지면서 20대 중반 이후에는 ‘유형3(재학+비경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편 ‘유형1(비재학+경활)’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중이다. 여성 청년층은 남성보다 대학졸업 및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연령증가에 따른 ‘유형1’의 증가추이는 남성보다 급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청년층의 특징적인 부분은 20대 후반 이후 ‘유형1’의 감소패턴이다. 즉 남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빠르게 이뤄지나, 결혼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발생하면서 ‘유형1(비재학+경활)’은 감소하고, ‘유형4(비재학+비경활)’는 증가한다. 한편

여성 청년층의 ‘유형4(비재학+비경활)’의 비중은 남성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각 연령별 비중은 25세 24.2%, 30세 37.9%, 34세 46.5%로 결혼과 출산의 생애과정을 겪으며, 경력단절이 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대학진학률의 상승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재편 등의 요인에 의해 청년층의 전문·관리직 진출이 확대되었다. 전문·관리직은 근로조건이나,

$$y(\text{전문·관리직 여부}) = \text{상수항} + \beta(\text{성}) + \beta(\text{혼인상태}) + \beta(\text{학력}) + \beta(\text{가구주 여부}) + \beta(\text{취업형태}) + \beta(\text{산업})$$

〈표 2-10〉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취업자 전체)

| | | model I b (s.e) | model II b (s.e) |
|--------------------------------------|-----------------|--------------------|---------------------|
| 인구학적 특성 | 성(기준 : 여성) | | |
| | 남성 | .41*** (.005) | .13*** .005 |
| | 연령 | -.001*** (.000) | -.002*** .000 |
| | 혼인상태(기준 : 미혼) | | |
| | 유배우 | .005*** (.005) | -.04*** .006 |
| | 학력(기준 : 중졸 이하) | | |
| | 고등학교 | 1.183*** (.014) | 1.407*** .015 |
| 대학교 | 3.869*** (.014) | 3.235*** .014 | |
| 대학원 | 5.639*** (.015) | 4.72*** .016 | |
| 가구주 여부(기준 : 가구주) | | | |
| 가구원 | -.189*** (.005) | -.168*** .005 | |
| 경제활동 특성 | 취업형태(기준 : 비임금) | | |
| | 임금근로자 | | -.14*** .005 |
| | 산업(기준 : 농림어업직) | | |
| | 광공업 | | 2.755*** .036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 1.992*** .036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 4.224*** .036 | |
| 전기·운수·통신·금융 | | 3.118*** .036 | |
| <i>constant</i> | | -1.547*** .011 | -2.314*** .014 |
| <i>-2LL</i> | | 1.66 | 1.36 |
| <i>Cox & Snell R²</i> | | .229 | .3 |
| 표본수(N) | | 2,231,472 | 2,083,335 |

주 :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 취업자임

*** p < .001, ** p < .01, * p < .1



보수, 근로자 복지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센서스 자료에 수록된 경제활동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항로짓 분석을 하였다. <표 2-10>은 2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 I 은 인구학적 변인만 투입된 모형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b = .41^{***}$)이, 미혼보다는 유배우일수록($b = .005^{***}$), 연령은 적을수록($b = -.001^{***}$) 전문·관리직에 고용될 확률이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취업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문·관리직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 청·장년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학력수준별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 비해 대졸($b = 3.869^{***}$)이나 대학원졸($b = 5.639^{***}$)이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높다. 특히 대학원졸의 b값이 가장 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뚜렷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에 비해 가구원일수록($b = -.189^{***}$)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은 낮아진다.

‘모형 II’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경제활동 특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형이다. 취업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아닐수록($b = -.14^{***}$) 전문·관리직 확률이 높으며, 종사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직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일수록($b = 4.224^{***}$) 전문·관리직에 고용될 확률이 가장 높다.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개인의 경제활동 특성이 투입된 후 R^2 는 .229에서 .3으로 상승하였다.

<표 2-11>은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년층(20~34세) 취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항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학적 특성만 투입된 ‘모형 I’의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b = -.61^{***}$)이 아닐수록, 연령이 많을수록($b = .03^{***}$), 유배우가 아닐수록($b = -.11^{***}$)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이 높고, 가구주일수록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높아진다. 청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와 20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에서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은 사뭇 대조적이다. 전체 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표 2-10>)는 남성이며, 연령이 적고, 혼인지위가 유배우일 경우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청년층만 대상으로 한 경우 여성이며, 연령이 높아지고, 미혼일수록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높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남성보다 빠르고, 미혼상태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모형 II’는 인구학적 특성에 경제활동 특성이 투입된 모형이다. 취업형태별로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일수록($b = .073^{***}$) 전문·관리직에 고용될 확률이 높다. 취업형태가 전문·관리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와 다르다. 청년층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 또한 임금근로자의 확률이 더 높다. 반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중·장년층은 전문·관리직

$$y(\text{전문·관리직 여부}) = \text{상수항} + \beta(\text{성}) + \beta(\text{혼인상태}) + \beta(\text{학력}) + \beta(\text{가구주여부}) + \beta(\text{취업형태}) + \beta(\text{산업})$$

<표 2-11>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청년층/ 20~34세)

| | | model I b (s.e) | model II b (s.e) |
|--------------------------------------|----------------|--------------------|---------------------|
| 인구학적 특성 | 성(기준 : 여성) | | |
| | 남성 | -.61*** (.007) | -.26*** (.008) |
| | 연령 | .03*** (.001) | .026*** (.001) |
| | 혼인상태(기준 : 미혼) | | |
| | 유배우 | -.11*** (.008) | -.12*** (.008) |
| | 학력(기준 : 중졸 이하) | | |
| | 고등학교 | 1.24*** (.078) | 1.09*** (.081) |
| 대학교 | 3.00*** (.078) | 2.63*** (.081) | |
| 대학원 | 4.69*** (.079) | 4.03*** (.082) | |
| 가구주 여부(기준 : 가구주) | 가구원 | -.19*** (.007) | -.2*** (.008) |
| | 경제활동 특성 | | |
| 취업형태(기준 : 비임금) | 임금근로자 | | .073*** (.012) |
| 산업(기준 : 농림어업직) | 광공업 | | 2.52*** (.09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 | 1.7*** (.096)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 | 4.04*** (.096) |
| 전기·운수·통신·금융 | | | 2.97*** (.096) |
| <i>constant</i> | | -2.226 (.036) | -3.00*** (.044) |
| <i>-2LL</i> | | 601935.66 | 506316.87 |
| <i>Cox & Snell R²</i> | | .133 | .244 |
| 표본수(N) | | 547,475 | 521,379 |

주 : 분석대상은 20~34세 & 취업자임

*** p < .001, ** p < .01, * p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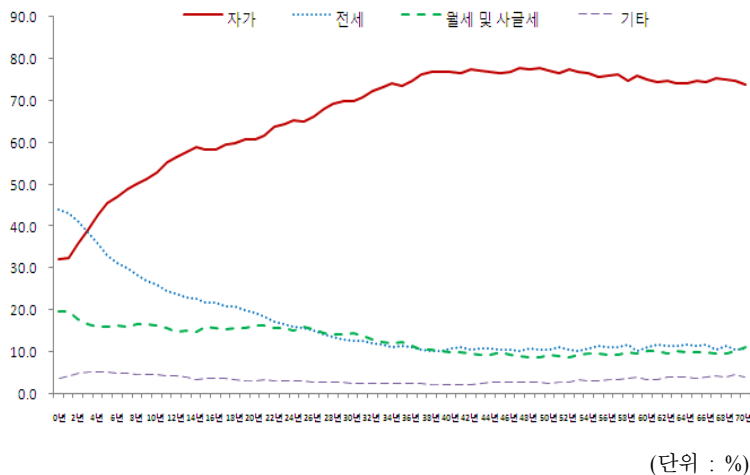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가 전문·관리직으로 고용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취업자의 업종별 전문·관리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농어업직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b= 4.04***)에 종사할수록 전문·관리직 고용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인만 투입된 ‘모형 I’의 R² = .13, 인구학적 변인에



경제적 특성이 고려된 ‘모형Ⅱ’의 $R^2 = .244$ 로 ‘모형Ⅱ’의 설명력이 모형Ⅰ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3. 주거(Housing)

‘주거’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사회 젊은층의 만혼 및 결혼기피 현상은 교육기간의 연장, 직업획득의 어려움 및 주거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 2-10]은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이다. 결혼 초기의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보다는 ‘전세’와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결혼기간 2년의 ‘자가’ 비중은 35.9%, 전세는 41.3%, 월세 및 사글세는 18.1% 수준이다.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결혼 5년차는 45.6%, 결혼 10년차는 52.8%, 결혼 15년차는 58.3%, 결혼 20년차는 60.8%, 결혼 30년차는 70.1% 수준이다. 즉 결혼 30년차는 10명 중 7명이 내 집에 산다고 할 수 있다.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전세’의 비중은 감소한다.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결혼기간 2년의 ‘전세’ 비중은 41.3%, 결혼 5년차는 33.2%, 결혼 10년차는 26.1%, 결혼 15년차는 22.0%, 결혼 20년차는 19.4%, 결혼 30년차는 13.0%로 결혼기간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전세’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 = ‘만나이’ - ‘초혼연령’

[그림 2-10]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

〈표 2-12〉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

(단위 : %)

| 결혼기간 | 자가 | 전세 | 월세 및 사글세 | 기타 | 합계 |
|--------|------|------|----------|-----|-------|
| 0~2년 | 33.9 | 42.6 | 19.2 | 4.4 | 100.0 |
| 3~5년 | 42.6 | 35.9 | 16.4 | 5.2 | 100.0 |
| 6~9년 | 49.5 | 29.3 | 16.6 | 4.7 | 100.0 |
| 10~14년 | 56.4 | 24.1 | 15.4 | 4.1 | 100.0 |
| 15~19년 | 59.4 | 21.3 | 15.8 | 3.5 | 100.0 |
| 20년이상 | 71.4 | 13.2 | 12.7 | 2.8 | 100.0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 = '만나이' - '초혼연령'

〈표 2-12〉는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를 기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혼기간 0~2년의 '자가' 비중은 33.9%이며, '전세'는 42.6%, '월세 및 사글세'는 19.2%, '기타'는 4.4%로 나타난다. 결혼기간이 증가하면서 '자가'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결혼기간 3~5년의 '자가' 비중은 42.6%이며, '전세'는 35.9%, '월세 및 사글세'는 16.4%이다. 결혼기간 6~9년은 '자가'는 49.5%, '전세'는 29.3%, 월세 및 사글세는 16.6%로 나타난다. 결혼기간 10년 이상이 되면서 '자가'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결혼기간 10~14년의 '자가' 비중은 56.4%이며, '전세'는 24.1%, '월세 및 사글세'는 15.4%이며 결혼기간 15~19년의 '자가' 비중은 59.4%, '전세'는 21.3%, '월세 및 사글세'는 15.8%로 나타난다.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은 '자가'의 비중은 71.4%인 반면, 전세는 13.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거영역에서 취약계층은 결혼 초기 및 1인 단독 노인가구일 것이다. 실제로 주거문제는 결혼기피 및 지연의 중요한 요인이며, 정부의 주거 정책 또한 이에 초점을 두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주거특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지역'이다. '지역'에 따른 주택가격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림 2-11]은 결혼기간 5년 이하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가'와 '전세' 비중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센서스 자료에서 결혼 5년 이하의 자가 비중은 38.5%이며, 전세는 39.0%, 월세 및 사글세는 17.7%로 나타난다. 결혼 초기는 대체로 '전세'로 시작하는 비중이 높는데, '자가'로 시작하는 경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지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지역별로 결혼 5년 이하의 자가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자가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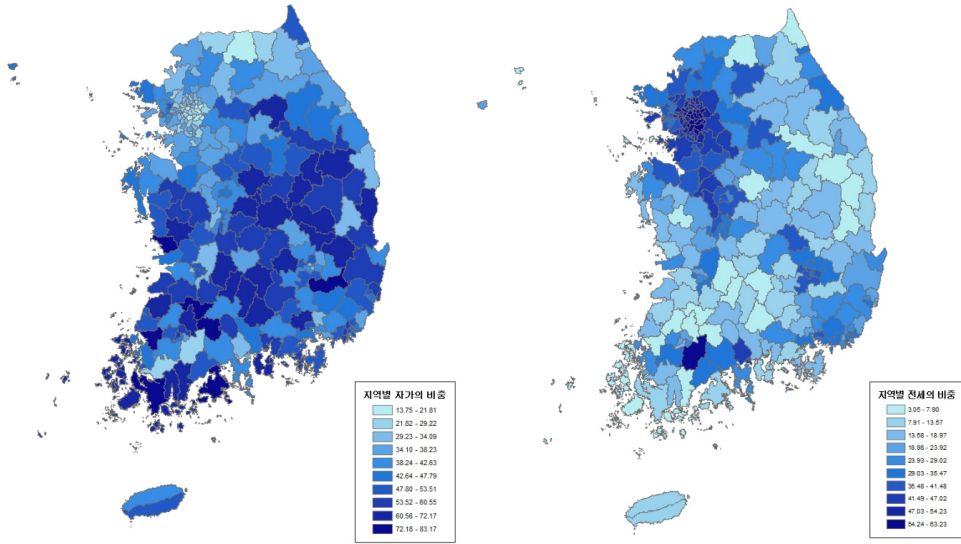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결혼 5년 이하 기혼자의 자가 비중이 낮은 지역은 서울시의 '용산구'(19.5%), '광진구'(20.4%), '송파구'(20.3%), '강동구'(21.4%) 등으로 나타나며,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13.8%), '성남시 중원구'(21.8%), '과천시'(21.3%), '고양시 일산동구'(24.7%), '하남시'(26.0%)



시군구의 지역별 자가, 전세 수지 도출

<자 가>

<전 세>



(단위 : %)

(단위 :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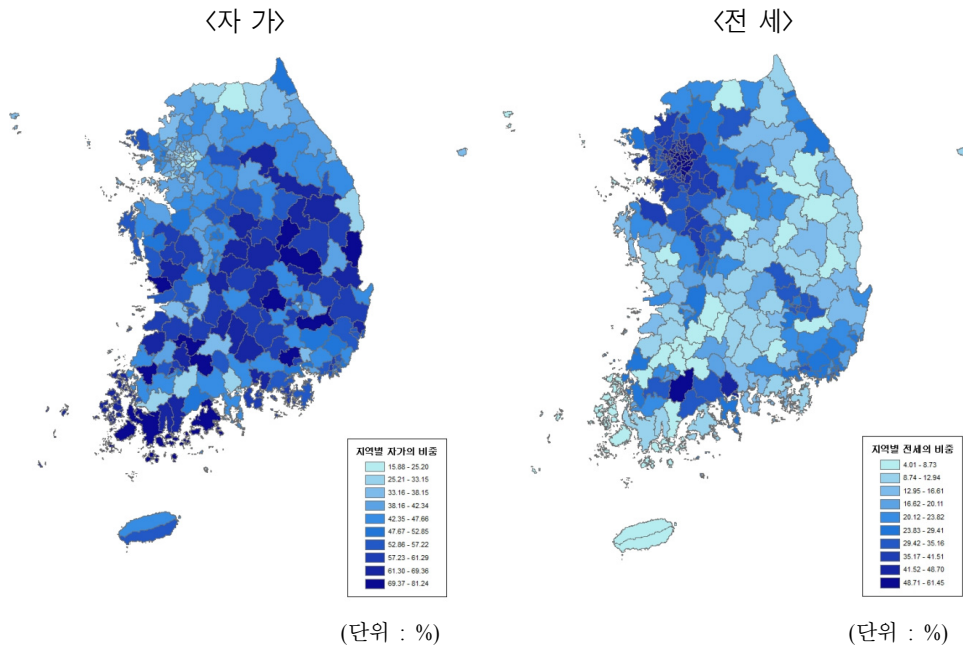
주 : '결혼기간' = '만나이' - '초혼연령'

[그림 2-11] 결혼기간 5년 이하 주택점유 형태

등이다. 광역시 중 '자가'비중이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34.9%), 기장군(37.9%)이며, 대구광역시는 '남구(30.7%)', '서구(32.3%)', 인천광역시는 '중구(35.5%)', 대전광역시는 '유성구(31.7%)'로 나타난다. 대체로 이들 지역은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5년 이하의 기혼자의 내 집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림 2-11]에 제시되었듯이 지역별 전세 분포는 자가 분포와 대칭적이다. 즉 '자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세'의 비중이 낮고, '자가'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전세'의 비중이 높다. 결혼 5년 이하의 평균 '전세' 비중은 39.0%로 '자가'(38.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전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일 수 있다. 결혼 5년 이하의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60.0%), 경기도 의왕시(61.5%), 경기도 과천시(63.2%), 경기도 의왕시(61.5%) 용인시 수지구(61.1%) 등으로 서울시 강남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전세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전세 비중이 낮은 지역은 서울시는 종로구(42.9%), 동대문구(47.0%) 등이며, 부산광역시는 사상구(20.9%), 기장군(21.7%), 북구(24.6%), 사하구(27.5%), 인천광역시는 옹진군(6.6%), 광주광역시는 남구(16.9%), 서구(21.9%), 대전광역시는 대덕구(30.5%), 울산광역시는 북구(21.5%)와 동구(23.8%)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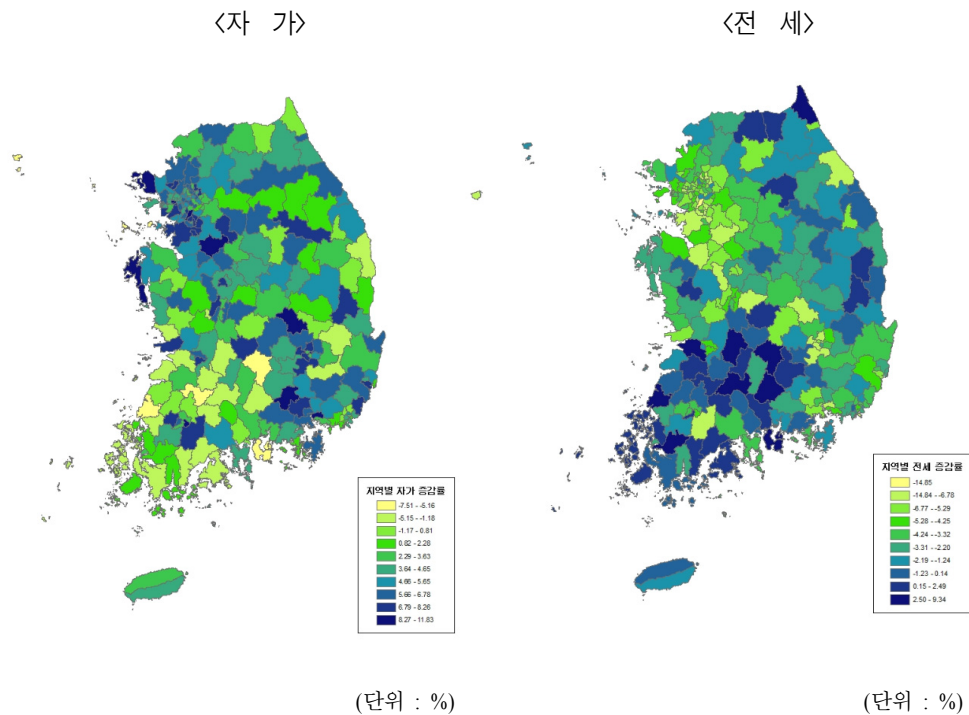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 = '만나이' - '초혼연령'

[그림 2-12] 결혼기간 10년 이하 주택점유 형태

[그림 2-12]는 결혼기간 10년 이하의 주택점유 형태이다. 결혼기간 5년 이하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가'의 비중은 증가하고, '전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결혼 10년 이하 기혼자의 평균 '자가' 비중은 43.9%이며, '전세' 비중은 34.2%, '월세 및 사글세'는 17.2% 이다. 지역별 자가 및 전세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결혼 5년 이하와 결혼 10년 이하 사이 자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8.9%p), 인천광역시 강화군(△9.5%p), 광주광역시 동구(△11.8%p), 부천시 원미구(△9.9%p), 경기도 의왕시(△10.4%p), 경기도 안성시(△8.8%p), 경북 구미시(△8.8%p), 경남 성산구(△8.7%p), 경남 의령군(△10.6%p)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곳으로 결혼기간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증가하면서 자가의 비중이 제법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결혼기간 5년 이하에서 결혼기간 10년 이하로 증가하면서 자가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일부 지역은 자가 비중이 감소하였다. 자가 비중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 순창군(-7.5%p), 전북 진안군(-3.4%p), 전남 영광군(-5.8%p), 경남 남해군(-6.2%p), 경남 거창군(-5.2%p) 등 비도심 지역으로 젊은층 거주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그림 2-13]은 지역별 자가 및 전세 증감율이다. 결혼기간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증가하면서 자가의 비중은 전국 평균 5.4%p 증가하였고, 전세의 비중은 전국 평균 -4.8%p 감소하였다¹³⁾. 결혼 5년 이하에서 결혼 10년 이하로 결혼기간이 증가하면서 ‘자가’ 비중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은 노원구(△7.1%p), 대구광역시 중구(△8.9%p), 달서구(△7.4%p), 달성군(△7.4%p), 인천광역시 강화군(△9.5%p), 광주광역시 동구(△11.8%p),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9.9%p), 안양시 동안구(△8.3%p), 의왕시(△10.4%p), 강원도 영월군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자가 및 전세 증감율’ = ‘결혼 10년 이하 자가(전세) 비중’ - ‘결혼 5년 이하 자가(전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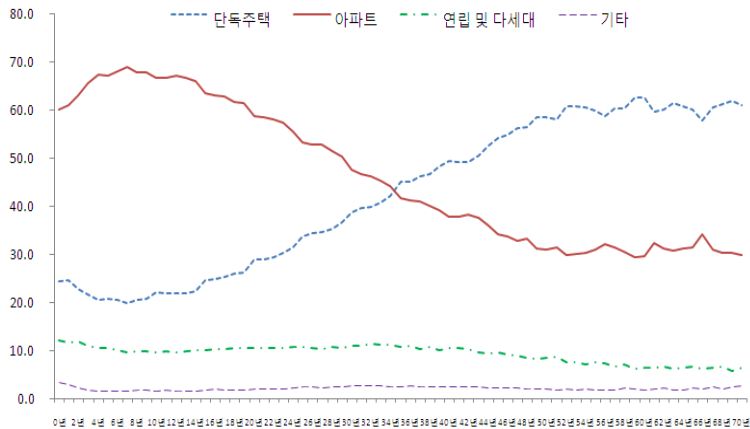
[그림 2-13] 자가 및 전세 증감율

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신혼부부와 관련된 정책의 중점추진과제는 1차 계획(‘06~‘10년)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2차 계획(‘11~‘15년)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 장려지원을 위한 사회적 배려강화, 결혼관련 교육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Delta 8.0\%$ p), 충북 청주시 흥덕구($\Delta 7.6\%$ p), 경북 구미시($\Delta 8.8\%$ p), 경남 의령군($\Delta 10.6\%$ p)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결혼 5년 이하에서 결혼 10년 이하로 결혼기간이 증가하면서 ‘전세’ 비중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7.6%p), 대구광역시 달성군(-8.7%p), 경기도 의왕시(-14.9%p), 안성시(-8.8%p), 경남 성산군(-8.0%p) 등이다. 반면 결혼 5년 이하에 비해 결혼 10년 이하 기간에 ‘전세’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Delta 3.0\%$ p), 전북 남원시($\Delta 2.8\%$ p) 및 진안군($\Delta 2.9\%$ p), 전남 영암군($\Delta 4.0\%$ p), 전남 영광군($\Delta 9.3\%$ p), 경남 남해군($\Delta 4.8\%$ p)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2-14]는 결혼기간별 주택유형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역U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파트 거주 비중은 가족 확장기에 높으며,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U자’ 형태로 가족 소멸기에 높다. 결혼기간별로 주택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 분포와 유사하게 ‘아파트’ 거주 비중은 결혼 10년 이내에 비중이 높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단독주택’은 결혼초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결혼 기간 50년 이후가 되면 약 60%가 단독주택에 거주함을 알 수 있다.



(단위 :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은 ‘만나이’ - ‘초혼연령’으로 생성되었음

[그림 2-14] 결혼기간별 주택유형

〈표 2-13〉 결혼기간별 주택유형

| | | | | | (단위 : %) |
|--------|------|------|----------|-----|----------|
| 결혼기간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 | 기타 | 합계 |
| 0~2년 | 23.8 | 61.6 | 11.9 | 2.8 | 100.0 |
| 3~5년 | 20.9 | 66.7 | 10.7 | 1.7 | 100.0 |
| 6~9년 | 20.4 | 68.1 | 9.9 | 1.7 | 100.0 |
| 10~14년 | 22.0 | 66.5 | 9.9 | 1.6 | 100.0 |
| 15~19년 | 25.3 | 62.5 | 10.3 | 1.9 | 100.0 |
| 20년 이상 | 43.1 | 44.5 | 10.0 | 2.4 | 100.0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은 '만나이' - '초혼연령'으로 생성되었음

〈표 2-13〉은 결혼기간별 주택유형을 기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혼기간 0~2년의 '단독주택' 비중은 23.8%이며, '아파트'는 61.6%, '연립 및 다세대'는 11.9%, '기타'는 2.8%로 나타난다. 결혼기간 3~5년은 '단독주택' 20.9%이며, '아파트' 66.7%, '연립 및 다세대'는 10.7%로 이 구간에서 단독주택 비중은 감소하고, 아파트 비중은 증가한다. 결혼기간 10~14년은 '단독주택'은 22.0%, '아파트'는 66.5%, 결혼기간 15~19년은 '단독주택'은 25.3%, '아파트'는 62.5%로 이 기간 중 단독주택 비중은 증가하고, 아파트 비중은 감소한다. 한편 결혼기간 20년 이상의 단독주택 비중은 43.1%, 아파트는 44.5%, 연립 및 다세대는 10.0%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 비중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거 영역에서 취약계층은 신혼부부와 노인 단독가구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가족형성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주거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주거관련 정책적 지원 역시 고령화·저출산 정책과 맞물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거의 안정화가 곧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다.

〈표 2-14〉는 센서스 자료를 통해 25~34세 기혼자의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은 개인특성만 투입된 모형이며, '모형 II'는 개인특성에 주거특성이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 I'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b = .35^{***}$), 연령이 많을수록($b = .09^{***}$) 자가에 거주할 확률은 높아진다.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일수록($b = .09^{***}$) 자가일 확률은 높아지나, 대학원 이상($b = -.13^{***}$) 고학력일수록 자가의 확률은 감소한다. 25~34세 연령층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일 경우, 학교졸업 후 결혼까지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력수준과 주택소유 간의 부적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에 비해 비가구주일수록($b = .84^{***}$) 자가에 거주할 확률이 높으며, 비경제활동상태가 아닐수록($b = -.07^{***}$) 자기집을 소유할 확률이 높다.



$$y(\text{주택소유}) = \text{상수항} + \beta(\text{성}) + \beta(\text{연령}) + \beta(\text{학력}) + \beta(\text{가구주 여부}) + \beta(\text{경활 여부}) + \beta(\text{주택유형}) \\ + \beta(\text{1인 가구 여부}) + \beta(\text{거주지})$$

〈표 2-14〉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5~34세 기혼자

| | | model I | | model II | |
|-------|----------------------------|-----------|--------|----------|--------|
| | | b | (s.e) | b | (s.e) |
| 개인특성 | 성(기준 : 여성) | | | | |
| | 남성 | .35*** | (.014) | .43*** | (.014) |
| | 연령 | .09*** | (.002) | .09*** | (.002) |
| | 학력(기준 : 고졸 이하) | | | | |
| | 대졸 | .09*** | (.009) | -.001 | (.009) |
| | 대학원 이상 | -.13*** | (.017) | -.18*** | (.018) |
| 주거 특성 | 가구주와 관계(기준 :가구주) | | | | |
| | 비가구주 | .84*** | (.013) | .95*** | (.014) |
| | 경제활동여부(기준 :경활) | | | | |
| | 비경활 | -.07*** | (.009) | -.12*** | (.01) |
| 주거 특성 | 주택유형(기준 : 아파트) | | | | |
| | 단독주택 | | | -.75*** | (.011)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 | | -.03* | (.013) |
| | 기타 | | | -.90*** | (.033) |
| |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 | | | |
| | 1인 가구 아님 | | | .23*** | (.234) |
| | 거주지 (기준 : 수도권) | | | | |
| | 비수도권 | | | .65*** | (.654) |
| | constant | -3.219*** | (.053) | -3.53*** | (.058) |
| | -2LL | 364976.2 | | 352696.7 | |
| | Cox & Snell R ² | .03 | | .07 | |
| | 표본수(N) | 277,225 | | 277,225 | |

*** p < .001, ** p < .01, * p < .1

‘모형Ⅱ’는 개인특성에 주거특성이 고려된 모형이다. ‘모형Ⅱ’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b= .43***), 연령이 높을수록(b= .09***) 주택소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b = -.001^{***}$)과 대학원 이상($b = -.18^{***}$)의 주택소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구와의 관계는 가구원일수록($b = .95^{***}$), 경제활동상태별로는 비경제활동상태가 아닐수록($b = -.12^{***}$)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주거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아닐수록($b = -.75^{***}$),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b = -.03^{*}$)이 아닐수록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이나 연립 등에 비해 높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25~34세 청년층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여부별로는 1인 가구가 아닐수록($b = .23^{***}$)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b = .65^{***}$)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결혼 초기의 주거는 신혼부부의 결혼결정 및 출산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혼 초기의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소득 및 자산소유 수준, 부모의 영향력, 거주지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신혼기의 주택점유 형태는 본인의 소득효과도 있겠지만, 더 큰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층의 학업기간의 연장 및 취업난은 결혼 및 출산의 주된 기피요인이며, 결혼 시 부모의 지원이 없이 좋은 주거환경을 획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의 제약 및 한계로 소득 및 부채, 주택소유에 부모의 영향력 등이 통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결혼초기 주택소유에 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 대학원 이상의 인적자본이 결혼초기의 주택소유에 부(-)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겠다.

<표 2-15>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 분석한 것이다. ‘모형 I’은 개인특성만 투입된 모형이며, ‘모형 II’는 개인특성에 주거특성이 투입된 모형이다. ‘모형 I’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b = -.09^{***}$), 연령이 많을수록($b = .02^{***}$) 자가에 거주할 확률은 높아진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에 비해 유배우일수록($b = 2.0^{***}$), 사별 및 이혼일수록($b = .99^{***}$)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학력수준별로는 초졸 이하에 비해 중졸 이하가 아닐수록($b = -.39^{***}$), 고졸 이하가 아닐수록($b = -.51^{***}$), 대졸 이상이 아닐수록($b = -.49^{***}$) 자가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학력수준과 주택소유 간에 부적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는 가구주일수록($b = -.08^{***}$)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모형 II’는 개인특성에 주거특성이 고려된 모형이다. ‘모형 II’의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b = -.23^{***}$), 연령이 높을수록($b = .02^{***}$) 주택소유 확률이 높아진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유배우일수록($b = 1.69^{***}$), 사별 및 이혼일수록($b = .87^{***}$)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한편 학력수준별로는 초졸 이하에 비해 중졸 이하가 아니거나($b = -.19^{***}$), 고졸 이하가 아닐수록($b = -.18^{***}$), 자가 거주 확률은 높다. 그러나 대졸 이상($b = .003^{*}$)은 초졸 이하에 비해 자가 거주 확률이 높다. 대체로 교육수준과 주택소유 간에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기인한

$$y(\text{주택소유}) = \text{상수항} + \beta(\text{성}) + \beta(\text{연령}) + \beta(\text{혼인상태}) + \beta(\text{학력}) + \beta(\text{가구주 여부}) + \beta(\text{주택유형}) + \beta(\text{1인 가구 여부}) + \beta(\text{거주지})$$

<표 2-15>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60세 이상

| | | model I | model II |
|--------------------------------------|--------------------|----------------|----------------|
| | | b (s.e) | b (s.e) |
| 개인 특성 | 성(기준 : 여성) | | |
| | 남성 | -.09*** (.008) | -.23*** (.008) |
| | 연령 | .02*** (.000) | .02*** (.000) |
| | 혼인상태(기준 : 미혼) | | |
| | 유배우 | 2.0*** (.025) | 1.69*** (.026) |
| | 사별 및 이혼 | .99*** (.025) | .87*** (.026) |
| | 학력(기준 : 초졸 이하) | | |
| | 중졸 이하 | -.39*** (.008) | -.19*** (.008) |
| 고졸 이하 | -.51*** (.008) | -.18*** (.008) | |
| 대졸 이상 | -.49*** (.01) | .003* (.011) | |
| 가구주와 관계(기준 : 가구주) | | | |
| 비가구주 | -.08*** (.007) | -.21*** (.008) | |
| 주거 특성 | 주택유형(기준 : 아파트) | | |
| | 단독주택 | | .24*** (.007)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 | .27*** (.011) |
| | 기타 | | -.85*** (.015) |
| |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 | |
| 1인 가구 아님 | | .59*** (.009) | |
| 거주지 (기준 : 수도권) | | | |
| 비수도권 | | 1.05*** (.006) | |
| <i>constant</i> | | -.628 (.029) | -.85 (.03) |
| <i>-2LL</i> | | 859045.7 | 816918.5 |
| <i>Cox & Snell R²</i> | | .037 | .082 |
| 표본수(N) | | 897,534 | 897,534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분석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임

*** p < .001, ** p < .01, * p < .1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는 가구주일수록($b = -.21^{***}$) 자가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일수록($b = .2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수록($b = .27^{***}$) 자가 거주 확률이 높다. 1인 가구 여부별로는 1인 가구가 아닐수록($b = .59^{***}$) 자가 거주 확률이 높으며,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b = 1.05^{***}$)에 거주할수록 자가 거주 확률이 높다.

주거 영역에서 신혼부부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은 고령자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의 보살핌 없이 홀로 거주하는 노인 단독세대는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60세 이상 고령자만 대상으로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1인 단독 세대가 아닐수록 자기집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건강(Health)

건강은 특히 노년기(老年期)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독립과 노동시장에서 은퇴 이후 ‘빈 둥우리’의 생애주기에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센서스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항목은 ‘활동제약’이다. 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7가지 영역(물리적 제약, 정신적 제약, 이동 제약 등)의 활동제약 여부를 통해 활동제약자의 규모 및 가구, 개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영역의 활동제약은 선천적인 장애 및 신체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에 비례하여 활동제약률¹⁴⁾은 증가한다.

[그림 2-15]는 활동제약자의 지역별 분포이다. 센서스에서 활동제약은 만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여기서는 5세 이상 및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를 대상으로 활동제약률을 집계하였다. 활동제약률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노화와 관련이 깊으며, 생산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활동제약률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제약률은 고령인구 비중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활동제약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 활동제약률은 전국 평균 7.6% 수준이며, 15~64세 생산가능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전국의 평균 활동제약률은 4.0% 수준으로 감소한다.

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활동제약률 14% 이상의 상위지역은 강원도 고성군(14.5%), 충북 보은군(15.9%), 충북 옥천군(14.4%), 충북 영동군(16.4%), 충북 괴산군(19.1%), 충북 단양군(16.9%) 등으로 나타난다. 전북지역은 남원시(18.0%), 김제시(18.8%), 진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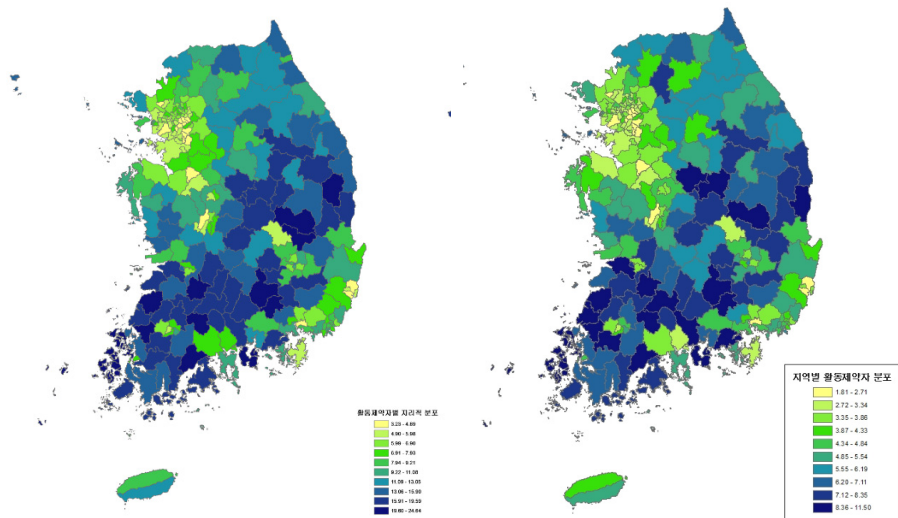
14) 1. 7가지 영역의 활동제약 항목 중 하나라도 활동제약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활동제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활동제약률(%) = 활동제약 있음 / 5세 이상 인구 × 100

(18.1%), 무주군(15.1%), 장수군(17.5%), 임실군(21.1%), 순창군(16.9%), 고창군(20.6%), 부안군(16.4%) 등의 활동제약률이 높으며, 전남지역은 나주시(18.8%), 담양군(18.5%), 곡성군(21.1%), 보성군(20.8%), 장흥군(18.4%), 함평군(21.4%), 신안군(24.6%) 등에서 활동제약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경북지역은 군위군(20.3%), 의성군(20.1%), 영양군(20.8%), 영덕군(19.1%), 성주군(19.3%) 등에서 활동제약률이 높으며, 경남지역은 의령군(22.2%), 남해군(21.4%), 합천군(21.8%) 등에서 활동제약률이 높다.

< 5세 이상 기준 >

< 15-64세 생산가능 인구 기준 >



(단위 : %)

(단위 :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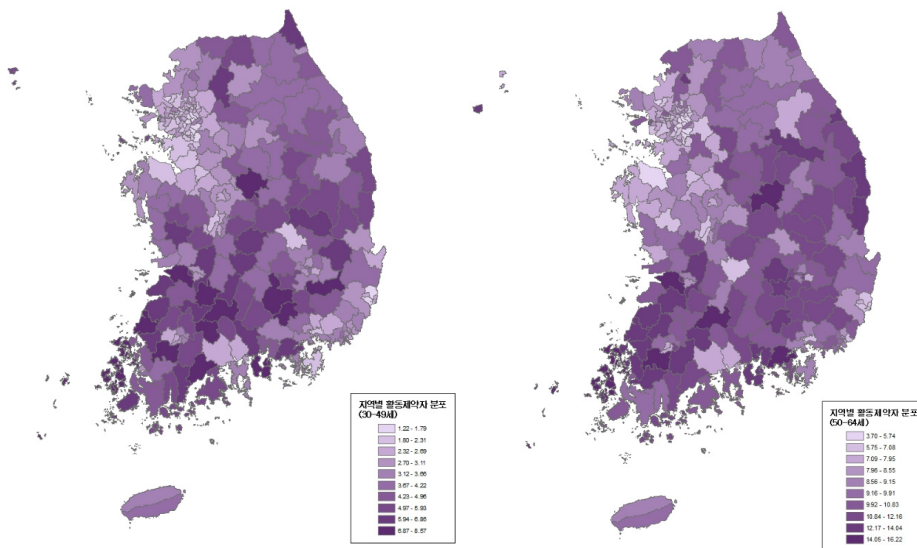
[그림 2-15] 활동제약자의 지역별 분포

15~64세 생산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활동제약률이 7%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충북 단양군(7.5%), 충남 부여군(7.0%), 전북 정읍시(7.3%), 남원시(9.5%), 김제시(9.5%), 완주군(7.7%), 임실군(8.7%), 순창군(7.8%), 고창군(8.5%), 부안군(7.1%) 등으로 나타난다. 전남지역 중 활동제약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구례군(7.2%), 고흥군(7.5%), 보성군(9.0%), 함평군(8.6%), 영광군(9.2%), 신안군(11.5%) 등이다. 한편 경북 지역 중 활동제약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영천시(7.8%), 상주시(7.5%), 문경시(8.5%), 군위군(8.1%), 의성군(8.6%), 영양군



(7.7%), 영덕군(8.9%), 청도군(8.4%), 울진군(8.3%), 울릉군(8.9%) 등이며, 경남 지역은 경남 의령군(9.8%), 고성군(8.8%), 남해군(9.3%), 하동군(8.5%) 등 지역의 활동제약율이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6] 및 [그림 2-17]은 장년기(30~49세) 및 중년기(50~64세)의 활동제약률이다. 각 지역별로 해당 연령층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장년기(30~49세)의 평균 활동제약률은 전국 평균 2.8%로, 5세 이상 및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와 동일하게 특광역시 및 경기도의 장년기(30~49세)의 활동제약률은 낮은 수준이다. 장년기의 활동제약률 7% 이상의 상위지역은 충북 괴산군(7.1%), 전북 남원시(7.1%), 김제시(7.8%), 전남 나주시(8.6%), 곡성군(8.2%), 신안군(7.8%), 경남 남해군(7.4%), 합천군(7.2%) 등으로 나타난다. 중년기(50~64세)의 활동제약률은 전국 평균 8.6%로, 활동제약률 15% 이상 상위지역은 전북 남원시(15.8%), 김제시(15.0%), 전남 나주시(15.2%), 신안군(16.2%), 경북 문경시(16.1%), 경남 고성시(15.3%) 등으로 나타난다.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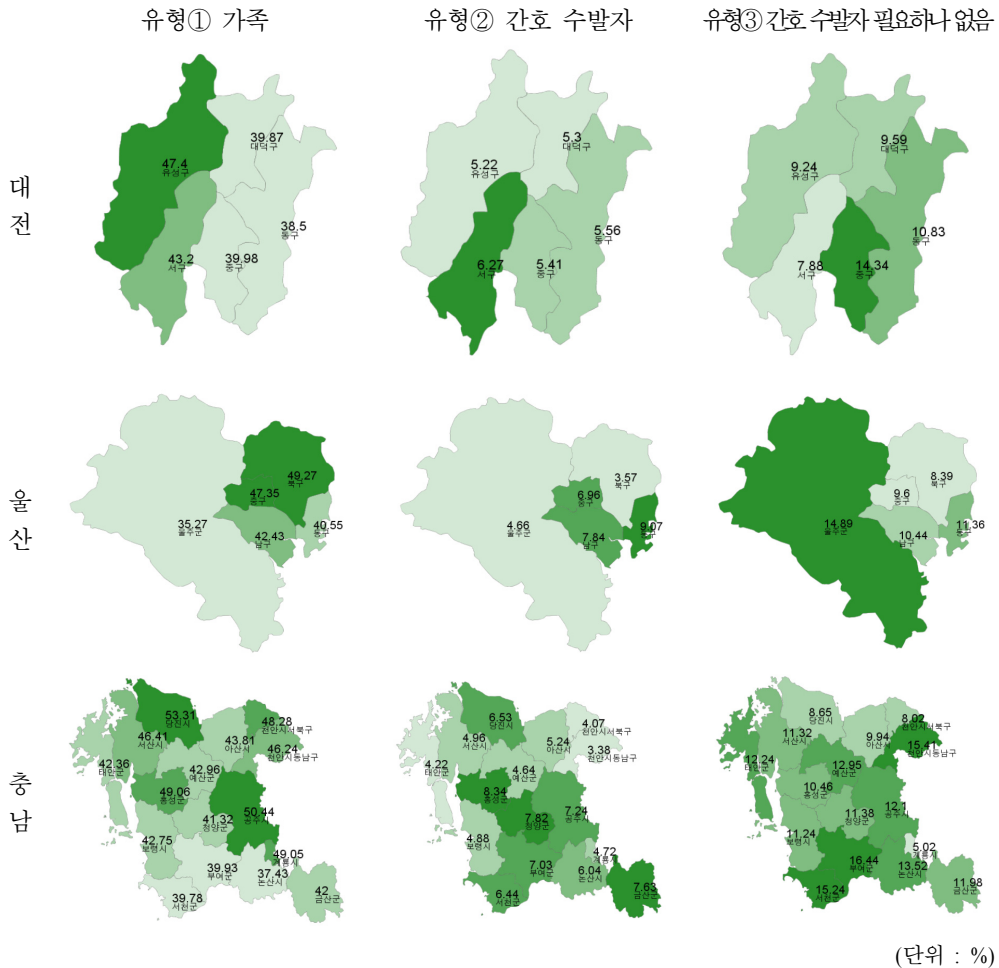
[그림 2-16] 활동제약자의 지역별 분포 :
장년기(30-49세)

[그림 2-17] 활동제약자의 지역별 분포 :
중년기(50-64세)

가족 내 ‘돌봄’과 관련하여 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가족 의존형’으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는 ‘시장 주도 해결형’으로 ‘돌봄’ 영역을 시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형태이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는 가족, 시장 혼재형 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여 간호·수발자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가족’이 간호·수발하는 경우로 이에는 배우자, 부모, (손)자녀나 그 배우자,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유·무료 간호·수발자’로 이는 비가족이 간호·수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은 ‘간호·수발이 필요하나 없는 경우’로 국가, 가족, 시장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영역에서 활동제약자를 취약계층으로 간주할 경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은 활동제약으로 간호·수발이 필요하나,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활동제약자의 간호·수발자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간호·수발 유형별 개인 특성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18]은 활동제약자의 간호·수발자 분포를 지역별로 도시한 것이다. 대전의 경우 ‘가족’이 수발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성구(47.4%)이며, ‘유·무료 간호·수발자’가 수발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구(6.3%), ‘간호·수발이 필요하나 없음’은 중구(14.3%)의 비중이 가장 높다. 대전 서구가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시장화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구는 활동제약자 중 간호수발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즉 가장 인구가 고령화된 지역인 한편 활동제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울산시는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비교적 젊은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활동제약자의 간호·수발자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이 간호수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북구(49.3%)와 중구(47.4%)이며, ‘유·무료 간호·수발자’가 수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중구(7.0%), 남구(7.8%), 동구(9.1%)로 나타난다. ‘간호·수발이 필요하나 없음’은 울주군(14.9%)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충남지역의 경우 ‘가족’이 수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당진시(53.3%), 공주시(50.4%)이며, ‘유·무료 간호·수발자’가 수발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홍성군(8.3%), ‘간호·수발이 필요하나 없음’은 부여군(16.4%), 천안시 동남구(15.4%)로 나타난다.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간호수발자 유형화

1. 가족 : 배우자, 부모, (손)자녀나 그 배우자,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은 가족
 2. 간호 수발자 : 유·무료 간호 수발자
 3. 간호수발자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
- 두 개까지 복수 응답됨(주된 응답 기준으로 집계함)

[그림 2-18] 활동제약자의 간호·수발자 유형의 지역별 차이 : 대전, 울산, 충남

<표 2-16>은 활동제약자의 간호·수발자 유형별 개인 특성이다. ‘가족’이 수발하는 유형은 남성이 45.2%, 여성 54.9%로 여성의 비중이 9.7%p 높고, ‘유·무료 간호 수발자’가 수발하는 유형은 남성 33.1%, 여성 66.9%로 여성이 33.8%p 높으며, ‘수발이 필요하나 없음’은 남성 32.6%, 여성 67.4%로 여성이 34.8%p 높다. 간호·수발자 세 가지 유형 중 ‘수발이

〈표 2-16〉 간호·수발자 유형별 개인 특성

(단위 : 명, %)

| | 간호·수발자 유형 | | | | | | |
|----------|-----------|------|------------------|------|-----------------|------|---------|
| | 유형1 : 가족 | | 유형2 : 유·무료 간호수발자 | | 유형3 : 수발필요하나 없음 | | 총합 |
|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 성 | | | | | | | |
| 남성 | 51,764 | 45.2 | 5,066 | 33.1 | 9,743 | 32.6 | 66,573 |
| 여성 | 62,883 | 54.9 | 10,234 | 66.9 | 20,114 | 67.4 | 93,231 |
| 연령 | | | | | | | |
| 0~9세 | 1,835 | 1.6 | 37 | 0.2 | 136 | 0.5 | 2,008 |
| 10~19세 | 3,630 | 3.2 | 94 | 0.6 | 228 | 0.8 | 3,952 |
| 20~29세 | 3,312 | 2.9 | 152 | 1.0 | 396 | 1.3 | 3,860 |
| 30~39세 | 5,295 | 4.6 | 393 | 2.6 | 892 | 3.0 | 6,580 |
| 40~49세 | 8,581 | 7.5 | 811 | 5.3 | 1,696 | 5.7 | 11,088 |
| 50~59세 | 12,849 | 11.2 | 1,441 | 9.4 | 2,808 | 9.4 | 17,098 |
| 60~69세 | 21,431 | 18.7 | 2,022 | 13.2 | 5,706 | 19.1 | 29,159 |
| 70~79세 | 33,726 | 29.4 | 5,342 | 34.9 | 10,746 | 36.0 | 49,814 |
| 80~89세 | 20,437 | 17.8 | 4,269 | 27.9 | 6,653 | 22.3 | 31,359 |
| 90세이상 | 3,551 | 3.1 | 739 | 4.8 | 596 | 2.0 | 4,886 |
| 교육수준 | | | | | | | |
| 초졸 이하 | 70,083 | 61.1 | 11,369 | 74.3 | 21,830 | 73.1 | 103,282 |
| 중졸 이하 | 14,823 | 12.9 | 1,501 | 9.8 | 2,759 | 9.2 | 19,083 |
| 고졸 이하 | 20,579 | 18.0 | 1,755 | 11.5 | 3,652 | 12.2 | 25,986 |
| 대학 이상 | 9,162 | 8.0 | 675 | 4.4 | 1,616 | 5.4 | 11,453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가구주 | 47,090 | 41.1 | 8,443 | 55.7 | 20,572 | 68.9 | 76,105 |
| 비가구주 | 67,557 | 58.9 | 6,712 | 44.3 | 9,272 | 31.1 | 83,541 |
| 경제활동 여부 | | | | | | | |
| 경활 | 24,442 | 22.0 | 1,712 | 11.3 | 5,637 | 19.0 | 31,791 |
| 비경활 | 86,432 | 78.0 | 13,509 | 88.8 | 24,004 | 81.0 | 123,945 |

주 : 활동제약자의 간호·수발자 현황이 조사된 대전, 울산, 충남의 집계 결과임
간호 수발 유형 중 간호·수발 불필요함은 분석에서 제외됨

필요하나 없음'의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가족'이 수발하는 유형의 여성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다.

간호·수발자 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가족'이 수발하는 유형은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9%이며, '유·무료 간호수발자'는 32.7%, '수발이 필요하나 없음'은 24.3%로 시장에 의존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가장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 분포는



연령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령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유·무료 간호수발자’의 초출 이하(74.3%) 비중이 가장 높고, 대학 이상(4.4%)의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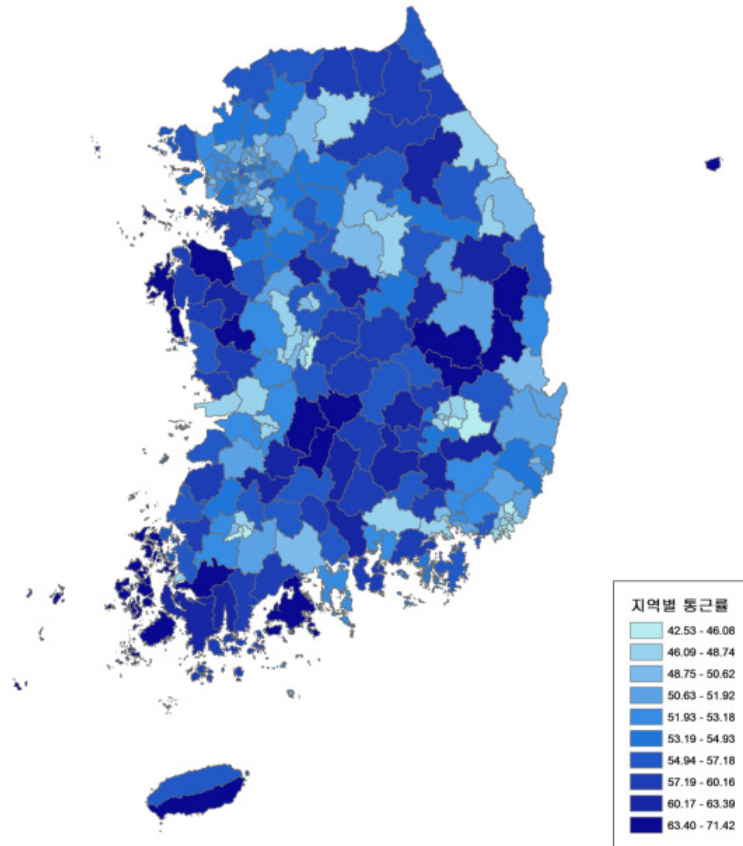
가구주와의 관계는 ‘수발 필요하나 없음’의 가구주 비중이 68.9%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유·무료 간호수발자’는 55.7%, ‘가족’은 41.1%인 것으로 나타난다. ‘수발이 필요하나 없음’의 가구주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이 노인 단독가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독 가구는 같이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형편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간호·수발자 유형별 경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활동제약자 중 ‘가족’이 돌보는 유형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2.0%로 가장 높으며, ‘수발자 필요하나 없음’은 19.0%, ‘유·무료 간호수발자’는 11.3% 순으로 나타난다. ‘유·무료 간호수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활동제약 수준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추측된다.

5. 통근·통학 및 거주지 이동(commutation & residential mobility)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센서스에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은 통근·통학 및 거주지 이동이다. 거주지 이동은 영구적인 거주지의 이전을 의미하는 한편, 통근·통학은 거주지의 이전이 아닌 근무처와 학교로 오가는 일시적인 이동(daily migration)을 의미한다. 특히 통근으로 형성되는 ‘통근권’은 쉽게 말해 출·퇴근 가능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행정구역(Administrative Areas)과는 별도로 통계적 구역(Statistical Areas)으로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센서스에서 나타나는 거주지 이동에 관해서는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I)」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근·통학률의 지역별 분포 및 거주지 이동 유형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일일이동으로서의 통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을 정의 하는데 ‘통근권(TTWA's : Travel to Work Area)’이 주요 개념으로 사용된다. 통근권이란 쉽게 말해 출·퇴근 가능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교통의 발달이 매개된 개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노동자가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Campbell, 1996; OECD, 1998),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실질적이고 유효한 지역을 하나의 노동시장권으로 간주하게 된다(박시내, 2009). 센서스에서는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통근·통학 여부 및 장소, 이용 교통수단,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그림 2-19]는 지역별 통근률이다. 이 지도는 통근량이나 통근 거리가 고려되지 않고, 시군구별 통근률만 고려되어 작성된 것이다. 통근은 거주지에서 직장 소재지로 출퇴근하는



(단위 :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12세 이상 조사됨

[그림 2-19] 지역별 통근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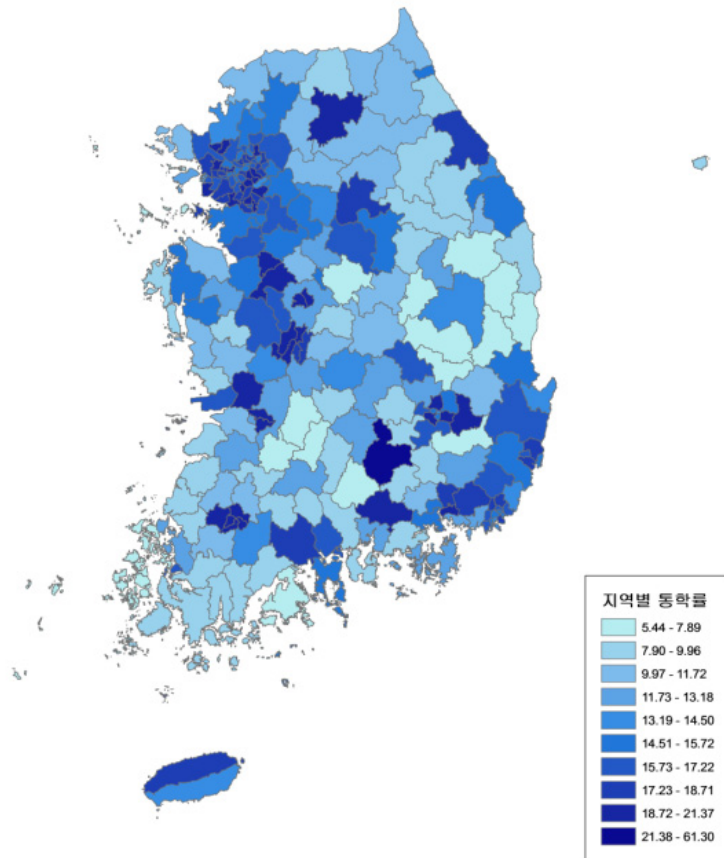
것으로 특광역시외의 통근률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통근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62.2%), 강원도 평창군(61.1%), 충북 괴산군(61.0%), 충남 예산군(61.1%), 충남 태안군(65.2%), 충남 당진군(64.4%) 등으로 나타난다. 호남지역은 전북 진안군(65.6%), 전북 무주군(64.6%), 전북 장수군(65.4%), 전북 임실군(62.5%), 전북 순창군(62.1%)의 통근률이 높은 수준이며, 전남 진도군(66.9%), 전남 신안군(71.4%)의 통근률이 높은 수준이다. 영남지역은 경북 군위군(65.8%), 경북 의성군(66.4%), 경북 청송군(66.2%), 경북 영양군(66.7%), 경북 울릉군(64.5%)의 통근률이 높은 수준이며, 경남지역은 경남 하동군



(61.5%), 함양군(62.2%), 합천군(61.3%) 등의 통근률이 높은 수준이다.

시군구별 통근률을 살펴본 결과, 통근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거주지의 산업기반이 잘 형성되지 못한 지역들로 유출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보다 세밀한 통근유형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는 통근자의 유출지(거주지 내 유출, 거주지 외 유출) 및 통근자의 개인특성 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20]은 지역별 통학률이다. 통학은 학교 및 학원으로 일일 이동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통학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 주변 지역이다. 통학률은 지역별 학령기 인구 비중 및 학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단위 : %)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그림 2-20] 지역별 통학률

지역별 통학률 19% 이상의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양천구(19.7%), 서초구(19.1%), 강남구(19.5%)인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시의 통학률은 대구광역시는 북구(19.4%), 수성구(20.9%), 달서구(20.0%), 인천광역시는 연수구(20.2%), 계양구(19.1%), 광주광역시는 서구(20.1%), 북구(20.2%)의 통학률이 높은 편이며, 대전광역시는 서구(20.2%), 유성구(21.2%)의 통학률이 높다. 경기도는 대체로 통학률이 높은 편인데, 수원시 장안구(19.9%), 수원시 영통구(20.3%), 성남시 분당구(19.1%), 안양시 동안구(19.4%), 안산시 상록구(19.8%), 고양시 일산서구(20.3%), 과천시(19.8%) 등의 통학률이 높다.

이 밖에 통학률이 높은 지역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20.7%), 청주시 흥덕구(20.3%), 충남 계룡시(20.4%), 전북 전주시 완산구(21.1%), 전주시 덕진구(21.4%), 경북 경산시(20.7%), 경남 성산구(20.3%)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통학률은 통학인구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학률이 높은 지역이 학령기 인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이다. 더불어 학교가 밀집해 있고, 학군이 비교적 잘 형성된 지역의 통학률이 높게 나타난다.

<표 2-17>은 거주지 이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 분석한 것이다. 센서스에서는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거주지 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이동의 양이 감소하면서 비이동자 비중은 증가하고, 1차·2차 및 귀환이동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논의된다. 한편 거주지 이동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대체로 젊은층, 고학력자 및 전문직종의 이동성이 높다고 논의된다. 생애주기별 거주지 이동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1차 및 2차 이동은 젊은층에서 그 비중이 높으며, 정착이동자는 중·장년기의 비중이 높았다(2013, 박시내 외).

본 연구는 센서스의 인구이동 관련 두 개의 항목(1년 전 거주지 및 5년 전 거주지)을 토대로 거주지 이동 유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모두 이동’은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이동한 경우이다. ‘1년 전 이동’은 1년 전에 이동하고 5년 전에는 이동하지 않은 경우, ‘5년 전 이동’은 1년 전에 이동하고 5년 전에는 이동하지 않은 경우, ‘비이동’은 1년 전 및 5년 전에 모두 이동하지 않은 경우이다.

‘모형 I’은 비이동자와 5년 전 이동 유형에 대한 인구학적 및 경제활동 특성, 통근·통학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을 이항로짓 분석한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b = -.19^{***}$), 연령이 적을수록($b = -.05^{***}$) 5년 전 거주지를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 한편 가구원보다는 가구주일수록($b = -.72^{***}$), 기혼자일수록($b = .39^{***}$),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b = .23^{***}$)이나, 대학교($b = .53^{***}$), 대학원($b = .81^{***}$)의 학력을 소지할수록 5년 전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

개인의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농림어업직에 비해 전문·관리직($b = .58^{***}$), 사무직($b = .44^{***}$), 판매직($b = .39^{***}$), 서비스직($b = .54^{***}$), 단순노무직($b = .38^{***}$)일수록 5년 전



$$y(\text{거주지 이동유형}) = \text{상수항} + \beta(\text{성}) + \beta(\text{연령}) + \beta(\text{가구주 여부}) + \beta(\text{혼인상태}) + \beta(\text{학력}) + \beta(\text{직업}) + \beta(\text{취업형태}) + \beta(\text{통근·통학 여부})$$

<표 2-17> 거주지 이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 | model I 비이동자 vs. 5년전 이동 b (s.e) | model II 비이동자 vs. 1년전 이동 b (s.e) | model III 비이동자 vs. 모두 이동 b (s.e) |
|----------------------------|--|--|---|---|
| 인구학적 특성 | 성(기준 : 여성) | | | |
| | 남성 | -.19*** (.005) | .4** (.018) | -.08*** (.008) |
| | 연령 | -.05*** (.000) | -.06*** (.001) | -.07*** (.000) |
| | 가구주 여부(기준 : 가구주) | | | |
| | 가구원 | -.72*** (.005) | -.33*** (.019) | -.92*** (.008) |
| | 혼인상태(기준 : 미혼) | | | |
| 유배우 | .39*** (.006) | .16*** (.21) | .12*** (.009) | |
| 학력(기준 : 중졸 이하) | 고등학교 | .23*** (.009) | .12*** (.034) | .12*** (.014) |
| | 대학교 | .53*** (.009) | .46*** (.036) | .42*** (.015) |
| | 대학원 | .81*** (.012) | .93*** (.043) | .75*** (.019) |
| | 경제활동 특성 | | | |
| 직업(기준 : 농림어업직) | | | | |
| 전문·관리직 | .58*** (.013) | .68*** (.051) | .57*** (.021) | |
| 사무직 | .44*** (.013) | .6*** (.052) | .39*** (.022) | |
| 판매직 | .39*** (.013) | .54*** (.051) | .34*** (.022) | |
| 서비스직 | .54*** (.013) | .67*** (.052) | .56*** (.022) | |
| 단순노무직 | .38*** (.012) | .53*** (.049) | .36*** (.02) | |
| 취업형태(기준 : 비임금) | | | | |
| 임금근로자 | .15*** (.005) | .12*** (.02) | .23*** (.009) | |
| 통근·통학 여부 | 통근·통학 여부 (기준 : 통근·통학 안함) 통근·통학 함 | -.07* (.031) | -.2 (.113) | -.05 (.053) |
| constant | | .13 (.02) | -2.12*** (.071) | -2.21*** (.032) |
| -2LL | | 1.522 | 196344.59 | 774218.72 |
| Cox & Snell R ² | | .062 | .007 | .044 |
| 표본수(N) | | 2,116,136 | 1,853,464 | 1,947,480 |

주 : 분석대상은 15세 이상임

*** p < .001, ** p < .01, * p < .1

인구이동 유형은 ‘비이동’은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거주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이며, ‘5년 전 이동’은 5년 전에만 거주지 이동한 경우, ‘1년 전 이동’은 1년 전에만 거주지 이동한 경우, ‘모두 이동’은 5년 전 및 1년 전 모두 거주지 이동한 경우임

거주지 이동을 했을 확률이 높다. 농림어업직이 이동이 거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직종별 b값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서비스직이 큰 편으로 이들 직종이 이동성이 강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취업형태별로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b = .15^{***}$)가 5년 전 거주지를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 통근·통학 여부별로는 통근·통학을 하지 않는 경우($b = -.07^*$) 5년 전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

‘모형Ⅱ’는 비이동자와 1년 전 이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인구학적 특성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일수록($b = .4^{**}$), 연령이 적을수록($b = -.06^{***}$), 가구주일수록($b = -.33^{***}$) 1년 전에 거주지 이동을 했을 확률이 높다. 한편 미혼보다는 유배우일수록($b = .16^{***}$), 중졸 이하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1년 전에 거주지 이동을 했을 확률이 높다.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모형 I 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직에 비해 전문·관리직($b = .68^{***}$), 사무직($b = .6^{***}$), 판매직($b = .54^{***}$), 서비스직($b = .67^{***}$), 단순노무직($b = .53^{***}$)일수록 1년 전에 거주지 이동을 했을 확률이 높다. 취업형태별로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b = .12^{***}$)일수록 1년 전에 거주지 이동을 했을 확률이 높다. 한편 통근·통학 여부가 거주지 이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모형Ⅲ’은 비이동자와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이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1년 전과 5년 전에 모두 이동한 집단은 이동자 유형 중 가장 이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b = -.08^{***}$), 연령이 적을수록($b = -.07^{***}$),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거주지 이동을 한 확률이 높다. 한편 가구주일수록($b = -.92^{***}$) 미혼보다는 기혼일수록($b = .12^{***}$),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거주지 이동을 한 확률이 높아진다.

경제활동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I’, ‘모형Ⅱ’와 유사하게 농림어업직보다는 전문·관리직($b = .57^{***}$), 서비스직($b = .56^{***}$), 사무직($b = .39^{***}$), 판매직($b = .34^{***}$), 단순노무직($b = .36^{***}$)일수록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거주지 이동을 한 확률이 높다. 취업형태별로는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일수록($b = .23^{***}$)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이동을 한 확률이 높으며, 통근·통학 여부가 거주지 이동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센서스 자료의 인구이동 관련 항목을 이용하여 거주지 이동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해 탐색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거주지 이동의 주된 요인은 ‘교육’과 ‘직장’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학교의 근거리로 이주하거나, 직장이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직장에 따라 가족이 이주하는 것이 이동의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개인의 인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젊고, 전문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이동성이 강하다는 속성이 발견된다. 최근에는 분거가족, 기러기가족 등 분리가족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인구이동의 새로운 패턴으로 이들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과거에는 가구주의 직장을 따라 가구가 이주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분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거주지 이동의 새로운 패턴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제4절 결론

인구·사회통계 자료에서 도출되는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은 정부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이슈를 이해하여 정책 필요성을 공유·공감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개인의 혼인력·출산력 변화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의 심층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통계 분석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개발원에서는 ‘12년 인구동태 생애주기 연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생애주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13년 진행된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연구(I)의 후속연구로 호주 통계청(ABS)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생애과정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 및 주제의 선정, 각 영역별 기초통계 및 모델링을 제시하고, 생애과정 전환요인을 주제별로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및 가족형성’은 초혼연령 및 출산 간격의 변화와 한 부모 가구의 현황과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코호트별 출산연령 및 출산기간, 한 부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고,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한 부모 가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델링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초혼연령은 상승한 반면, 출산기간은 단축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기혼여성의 총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한 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블루칼라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출산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이혼율의 증가로 한 부모 가구 및 그에 속한 자녀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 부모 가구에 속한 확률을 모델링한 결과 학력수준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비경제활동 상태일수록 한 부모 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 영역에서는 청년층(20~34세)의 재학인구 추이 및 노동시장 진입기의 학업과 일 유형의 변화, 청년층의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논의하였다. 대학 진학률의 상승 및 취업대기형 재학생의 증가로 청년층 중 재학인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성별 학업과 일 유형을 살펴 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빠르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전문·관리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고, 미혼이며, 연령이 많고, 서비스업에 종사할수록 전문·관리직 고용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주거’ 영역에서는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 및 주택유형의 분포를 살펴보고, 젊은층 및 고령층의 주택소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거영역에서 취약계층은 주로 내 집 마련 이전시기인 신혼부부와 1인 노인가구가 될 것이다.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는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의 비중은 감소한다. 결혼기간별 주택유형은 젊은층의 아파트 선호 경향이 반영되어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단독주택 비중은 증가한다. 결혼기간 5년 이내의 자가 및 전세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내 집 장만의 시기가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 초기의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짓 분석한 결과 소득 및 자산, 부모의 지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택소유에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은 결혼초기의 주택소유에 오히려 부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건강과 관련해서는 활동제약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다. 센서스에서 활동제약은 신체적 및 정신적 제약, 취업활동 제약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활동제약자의 지리적인 분포와 돌봄 현황을 분석하였다. 활동제약은 선천적인 장애 및 신체적 노화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증가에 비례하여 활동제약률은 대체로 증가한다. 또한 도시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활동제약률이 높다. 활동제약자 간호수발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이 돌보는 유형, 시장에 의존하는 유형,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유형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인구가동과 관련하여 통근 및 통학률의 지역별 분포 및 거주지 이동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근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거주지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며, 통학률이 높은 지역은 학령기 인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이다. 한편 센서스 자료의 거주지 이동 항목을 이용해 거주지 이동유형을 분류하고,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젊은 세대이며,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인구 이동성이 높다는 특성이 발견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무엇보다 인구사회통계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의 주된 영역을 설명하고, 각 영역별 기초특성 및 전환요인을 증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연연령은 상승한 반면 총 출산기간은 단축되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로 한 부모 가구 및 그 자녀세대는 증가하여왔다. 진학률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취업문턱이 높아져 청년층 중 재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 부모 가구의 자녀세대 및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청년층은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집단이다. 한편 주거와 건강 영역에서 취약계층은 내 집 마련 이전 시기의 청년층 및 고령층이 될 것이다. 주거상황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입안에는 이같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과정 각 영역별 취약계층의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박시내(2009),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한 권역설정 연구」, 통계개발원
- 박시내·박준오·류광현(2014),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I)」, 통계개발원
- 안병철(1994), 「라이프 코스 연구에 관한 일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16호 봄 : pp.57-65
- 한경혜(1993),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유형 변화」, 사회와 역사 vol 39 : pp.121-171
- 윤진(1988),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 :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취업 및 은퇴 적령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심리학회지 vol 7, No 2 : pp.127-139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24집(겨울호) : pp.103~120
- 윤진·심재웅(1986),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I) : 결혼, 출산시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심리학회지 vol 6, No 1 : pp.1225-1356
- 한경혜(1991), 「세대관계 측면에서 본 Life Course 전이와 역연쇄전이의 시기 : 결혼연령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1(1) : pp.36-48
- 조은(1990), 「역사적 형태로서의 가족과 계급 : 서구 가족사 연구쟁점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vol 20 : pp.11-41
- 한경혜(1993), 「사회적 시간과 한국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 생애과정 관점과 기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제27집(겨울호) : pp.295~317
-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제42집 3호 : pp.86~118
- 우해봉(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pp.151~179
- 송현주·윤정혜(2012), 「중·고령자 빈 등우리 가계의 부채 보유여부와 가계 재무상태 : 소득과 자산수준을 고려하여」, 한국가정경제학회지 50(4) : pp.37-50



2. 국외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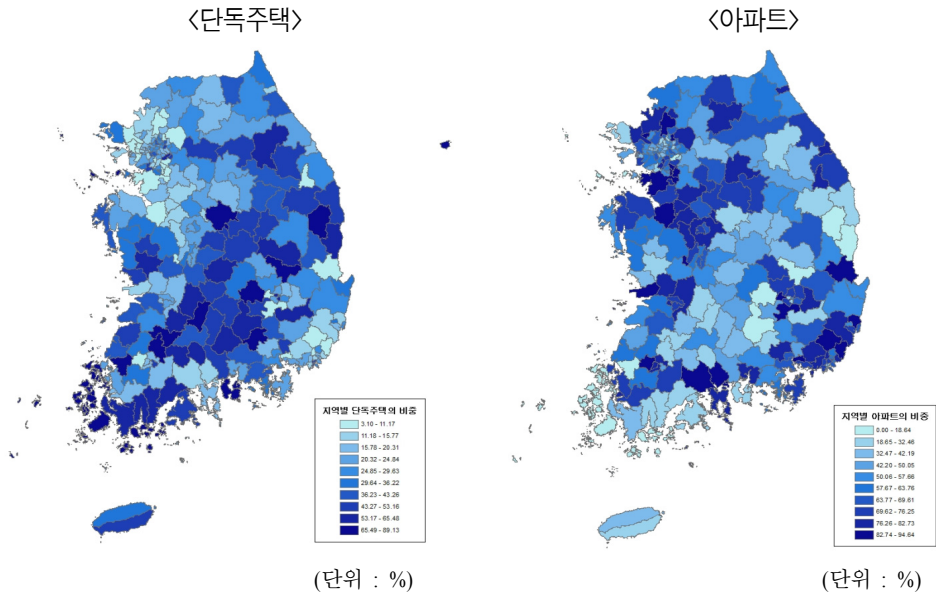
- Angela M. O'Rand & Margaret L. Krecker(1990), "Concept of the Life Cycle : Their History, Meanings, and Us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6 : 241-262
- Linda K. George(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9 : 353-373
- Gunhild O. Hagestag(1988), "Demographic Change and the Life Course : Some Emerging Trends in the Family Realm", *Family Relations* Vol 37. No 4 : 405-410
- John Demos & Virginal Demos(1969), "Special Section : History of The Family, Adolescence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1, No 4 : 632-638
- Charles Hirschman & Ronald Rindfuss(1982), "The Sequence and Timing of Family Formation Event in As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October : 660-680)
- Vaughn R.A. Call & Jay D. Teachman(1996), "Life-Course Timing and Sequencing of Marriage and Military Service and Their Effects on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February : 219-226)
- Helga A. G. De Valk & Aart C. Liefbroer(2007), "Timing Preferences for Woman's Family-Life Transition :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mong Migrants and Dut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February : 190-206)
- Feinian Chen, Yang Yang & Guangya Liu(2010), "Social Change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over the Life Course in China : A 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1) : 125-150
- Frank F. Furstenberg(2000), "The Sociology of Adolescence and Youth in the 1990s : A Critical Commenta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November : 896-206
- Marini, Margaret M(1984), The Order of Ev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ology of Education* Vol 57, No 2 : 63-84
- Jana L. Raup and Jane E. Myers(1989), "The Empty Nest Syndrome : Myth or Real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november/december, vol. 68 : 180-183
- Julie S. Dare(2011), "Transition in Midlife Women's Lives : Contemporary Experienc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 32 : 111-133

< 부 록 >

<부표 2-1> 한 부와 한 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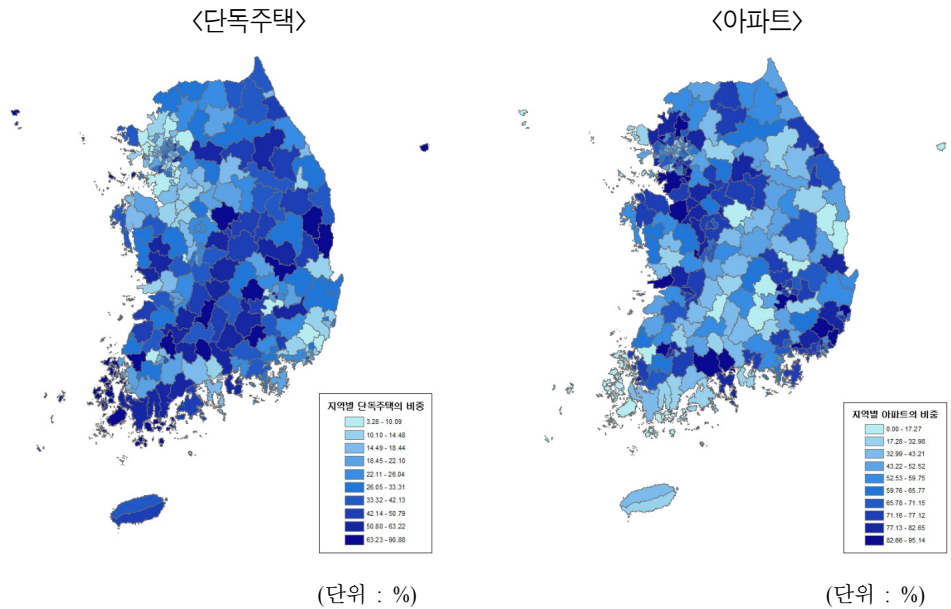
| 연령 | 한 부모 가구 | | | | | |
|----------|-----------|-------|---------|-------|-----------|-------|
| | 전체 | | 한부 | | 한모 | |
|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사례수 | 비중 |
| 19세 이하 | 366 | 0.0 | 103 | 0.0 | 263 | 0.0 |
| 20세~29세 | 30,023 | 2.0 | 5,319 | 1.5 | 24,704 | 2.1 |
| 30세~39세 | 206,012 | 13.7 | 38,014 | 11.0 | 167,998 | 14.5 |
| 40세~49세 | 555,629 | 36.9 | 125,210 | 36.1 | 430,419 | 37.1 |
| 50세~59세 | 455,473 | 30.2 | 116,688 | 33.6 | 338,785 | 29.2 |
| 60세 이상 | 259,544 | 17.2 | 61,974 | 17.8 | 197,570 | 17.0 |
| 계 | 1,507,047 | 100.0 | 347,308 | 100.0 | 1,159,739 | 100.0 |
| 교육수준 | | | | | | |
| 초졸 이하 | 264,440 | 17.6 | 45,234 | 13.0 | 219,206 | 18.9 |
| 중졸 이하 | 213,169 | 14.1 | 49,692 | 14.3 | 163,477 | 14.1 |
| 고졸 이하 | 657,198 | 43.6 | 153,966 | 44.3 | 503,232 | 43.4 |
| 대재 이상 | 372,240 | 24.7 | 98,416 | 28.3 | 273,824 | 23.6 |
| 계 | 1,507,047 | 100.0 | 347,308 | 100.0 | 1,159,739 | 100.0 |
| 경제활동 여부 | | | | | | |
| 경활 | 944,938 | 62.7 | 261,579 | 75.3 | 683,359 | 58.9 |
| 비경활 | 562,109 | 37.3 | 85,729 | 24.7 | 476,380 | 41.1 |
| 계 | 1,507,047 | 100.0 | 347,308 | 100.0 | 1,159,739 | 100.0 |
| 종사상 지위 | | | | | | |
| 임금근로자 | 643,087 | 68.1 | 170,965 | 65.4 | 472,122 | 69.1 |
| 자영자 | 198,776 | 21.0 | 60,645 | 23.2 | 138,131 | 20.2 |
| 사업주 | 86,005 | 9.1 | 26,301 | 10.1 | 59,704 | 8.7 |
| 무급가족종사자 | 17,070 | 1.8 | 3,668 | 1.4 | 13,402 | 2.0 |
| 계 | 944,938 | 100.0 | 261,579 | 100.0 | 683,359 | 100.0 |
| 점유형태 | | | | | | |
| 자가 | 675,653 | 44.8 | 150,818 | 43.4 | 524,835 | 45.3 |
| 전세 | 342,841 | 22.8 | 70,185 | 20.2 | 272,656 | 23.5 |
| 월세 및 사글세 | 429,437 | 28.5 | 106,443 | 30.7 | 322,994 | 27.9 |
| 기타 | 59,116 | 3.9 | 19,862 | 5.7 | 39,254 | 3.4 |
| 계 | 1,507,047 | 100.0 | 347,308 | 100.0 | 1,159,739 | 100.0 |
| 주택유형 | | | | | | |
| 단독주택 | 561,260 | 37.2 | 141,273 | 40.7 | 419,987 | 36.2 |
| 아파트 | 710,303 | 47.1 | 150,107 | 43.2 | 560,196 | 48.3 |
| 연립주택 | 57,471 | 3.8 | 13,112 | 3.8 | 44,359 | 3.8 |
| 다세대주택 | 146,712 | 9.7 | 34,503 | 9.9 | 112,209 | 9.7 |
| 기타 | 31,301 | 2.1 | 8,313 | 2.4 | 22,988 | 2.0 |
| 계 | 1,507,047 | 100.0 | 347,308 | 100.0 | 1,159,739 | 100.0 |

주: 한 부모 가족(한 부+미혼자녀, 한 모+미혼자녀) 중 가구주만 대상으로 집계함(가구주가 미혼자녀이면서 성이 다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 = '만나이' - '초혼연령'

[부그림 2-1] 결혼기간 5년 이하 주택유형



자료 : 인구센서스 개인 표본자료(2010년)
 주 : '결혼기간' = '만나이' - '초혼연령'

[부그림 2-2] 결혼기간 10년 이하 주택유형